

Russia Policy Review  
ISSN 2586-100X

2019

Vol.3 | No.3 Fall

#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최근 한·일 갈등 : 러시아의 시각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미  
러시아의 산업정책을 활용한 남-북-러 3각 산업협력 추진 방향  
북·미 판문점 회담  
G20 정상회의, 그리고 푸틴-아베 정상회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 오사카 라운드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  
러시아와 아태지역에 대한 단기 전망  
중국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양극화된 평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인도차이나 벡터 : 메콩강 자원개발 문제와 러시아의 이해관계  
화폐·여신 시스템 및 금융 시장 트렌드 분석  
러시아연방 연방주체 경제 발전 추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Russia Policy Review

## 2019

Vol.3 | No.3 Fall

『러시아 폴리스 리뷰』는 러시아의 시각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국제문제 및 정책 연구자들에게 러시아의 시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선별한 자료를 번역해 발간하는 정책저널이다.

Russia Policy Review

통권 제10호 2019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표상용(한국외국어대학교)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편집인 /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편집 및 운영위원 /

V. V. Mikheev(MEMO)

S. D. Valentey(PRUE)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김현택(한국외국어대학교)

손성환(前주스웨덴 대사)

홍완석(한국외국어대학교)

황성우(한국외국어대학교, 간사)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주 소 /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전 화 / 031-330-4852

팩 스 / 031-330-4851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us.or.kr>

디자인·편집 / (주)이환디앤비(02-2254-4301)

인쇄인 / 송용수

인쇄처 / (주)이환디앤비

ISSN 2586-100X

비매품

※ 본 잡지의 내용을 허가없이 무단전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최근 한·일 갈등 : 러시아의 시각  
알렉산드르 포도롭스키, 비탈리 슈비코 | 3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미  
올레그 다비도프 | 7

러시아의 산업정책을 활용한 남-북-러 3각 산업협력 추진 방향  
김학기 | 11

북·미 판문점 회담  
올레그 다비도프 | 17

G20 정상회의, 그리고 푸틴-아베 정상회담  
비탈리 슈비코 | 21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 오사카 라운드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24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  
올레그 다비도프 | 28

러시아와 아태지역에 대한 단기 전망  
바실리 미헤예프 | 32

중국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양극화된 평가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 36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인도차이나 벡터 : 메콩강 자원개발 문제와 러시아의 이해관계  
예브게니 카나예프 | 40

화폐·여신 시스템 및 금융 시장 트렌드 분석  
세르게이 발렌테이 | 47

러시아연방 연방주체 경제 발전 추세  
세르게이 발렌테이 | 55

# Russia Policy Review

## 러시아 폴리시 리뷰

최근 한·일 갈등 : 러시아의 시각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미  
러시아의 산업정책을 활용한 남-북-러 3각 산업협력 추진 방향  
북·미 판문점 회담  
G20 정상회의, 그리고 푸틴-아베 정상회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 오사카 라운드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  
러시아와 아태지역에 대한 단기 전망  
중국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양극화된 평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인도차이나 벡터 : 메콩강 자원개발 문제와 러시아의 이해관계  
화폐·여신 시스템 및 금융 시장 트렌드 분석  
러시아연방 연방주체 경제 발전 추세



『러시아 폴리시 리뷰』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에 제대로 접근할 기회가 없는 국내 정책연구자들과 러시아 연구자들에게 러시아 이너씨클의 시각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선별한 자료를 번역해 발간하는 정책저널입니다.

발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2017년 7월 러시아 최고 싱크탱크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와 공동으로 창간호를 발간했으며, 지금까지 계간지로서 총 10회 발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약 3,500명, 오프라인으로 약 500명의 연구자/기관들이 저널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8호부터는 1907년에 설립된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PLEKHANOV Russian University of Economics)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세 기관 이름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폴리시리뷰』 편집위원 일동



# 최근 한·일 갈등 : 러시아의 시각

알렉산드르 포도롭스키, 비탈리 슈빗코

2019년 7~8월 러시아 내 전문가들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문제들 중 하나는 급격한 한·일 관계 악화였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일련의 조치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업을 위해 동원된 한국인들의 노동력을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호의적으로 반응한 사실에서 촉발됐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해 그 보복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과 화학물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2019년 8월 일본 정부는 수출 우대 절차가 적용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아베 내각은 한국 정부가 과거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을 지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하며 양국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미국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도 이에 맞서 대일 수출입

규제를 강화했다.

러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일 관계 악화 이유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도 경제·무역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식하고 있다. 즉 일부 평론가들은 한·일 갈등을 미·중 '관세 전쟁,'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미·일 무역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

이와 더불어 한·일 양국이 쌍방 간 무역 규제를 주고받는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의 정치 엘리트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그런 까닭에 양국의 과거사 평가와 관련된 서로 간의 청구권 주장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양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신들만의 시각을 고집해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영토 분쟁, 식민 통치와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과 관련된 한국인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배상 문제, 공식 문서와 연설에 드러난 양

국 상호관계사의 문제들, 그 외의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한·일 양국 사이에서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격화되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재연된다. 그 이유는 양국의 정치 엘리트 계급이 서로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국가 간의 상호관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 간의 충돌은 빠르게 악화된다. 그러나 한번 높아진 긴장 상태가 다소 누그러지는 반대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고 긴장이 증대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이성적 차원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의존적, 특히 경제 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이며 정상적이고 동등한 국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매번 반복되는 적대적인 행위와 발언 뒤에는 갈등을 비교적 안전한 궤도로 환원시키고 건설적인 상호관계를 복원하는 길을 모색한다. 그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대미(對美) 동맹관계이다. 미국은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3자 동맹과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의 적대적인 수사로 인해, 때로는 2019년 여름처럼 양국 간 신뢰 관계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군 당국과 특수 기관들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가 위협받기도 한다.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 것

에 대해 독일과 폴란드는 적지 않은 결정을 채택한 것 같다. 폴란드는 양국 간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들 또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은 항상 거부하고 있다.

붕합되지 않은 갈등의 기저에 놓여있는 것이 비극적인 과거의 유산으로 남겨진 문제들만은 아닌 것 같다. 독일과 폴란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는 오늘날 변화하는 경제, 정치, 군사적 균형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드러난다. 즉 지역정치와 세계정치에서 폴란드와 한국이 속한 ‘중견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중견국(호주, 터키, 카자흐스탄도 포함됨)들은 현대 국제관계,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 더 눈에 띄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시도들, 더욱이 ‘시니어 파트너와 주니어 파트너’ 간 대화 재개로 해석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시도들과, 중견국들이 독자적으로 정치적·경제적 결정을 내리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언제나 중견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한·일 갈등은 동북아시아에 구축된 기존의 미·일 방위동맹과 한·미 방위동맹의 균형 문제를 야기한다. 동북아 역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서 한국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핵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평양과 독자적으로 대화하려는 시도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대외정책 분야에서 ‘평양과의 관계 구축’을

포함해 커져가는 한국의 야망을 미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납득할 것인지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한국과 일본의 정계와 학계에 양자 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크지 않다. 논란이 되는 문제들과 특정 사안들에 대한 의견 접근과 상호이해를 향한 큰 틀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고 있다.

북한 지도부와 상호관계 구축이라는 한·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연대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행동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의 안보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점에서도 양국은 북한 지도부와 합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일 뿐이다. 어느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다양한 단계의 협상 의제, 협상 순위와 성격 등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서로 간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 이 문제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정계 사이에서 상호 신뢰가 강화되는 모습을 관측할 수 없다.

한·일 간의 영토분쟁과 관련된 합의가 없다는 사실도 추가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양국은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보여준 항의내용에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심각한 불화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최근 경제·무역 분야에서 발생한 한·일 관계의 긴장 상태는 실제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양국 간 신뢰 부족이라는

간단치 않은 상황과 더불어 두 나라의 사회적 인식 속에 한·일 관계가 역사적인 배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정책에 한·일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웃 국가들의 신뢰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 협력에 관한 현안들이 의제로 남아있다. 이것이 러시아의 아태지역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러시아의 입장은 이 지역 모든 국가들과 경제·무역 관계를 확대하고 상품과 서비스 이동 경로의 장벽을 낮추고 국가 간의 교류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유엔이 채택한 것이 아니라면 경제 제재에도 반대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간의 상호 무역 규제는 러시아에 깊은 실망을 주고 있다. 러시아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 갈등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또한 러시아의 우선순위에 반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의 참여 하에 다른 국가들과 국제단체들, 특히 유엔의 지지를 받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협상국들의 분열과 정치적 대립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입지만 손상시킨다. 한·일 갈등으로 악화되는 심각한 미·중, 미·러 대립이 국제공동체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핵 능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북한의 외교 전술 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한·일 갈등의 조속한 해결, 동북아 내 국제협력 강화, 한반도의 정치상황 개선 노력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번역 : 김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A.N. Fedorovskij) IMEMO 아태지역 책임연구원,  
비탈리 슈빗코(V. G. Shvydko) IMEMO 일본 경제정치부장
- 원제 : Кризис в отношениях Южная Корея – Япония: взгляд из России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9년 8월 25일)



---

#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미

---

올레그 다비도프

---



(출처: russian.news.cn)

최근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북·중 고위급 접촉이 매우 인상적이다. 2019년 6월 20~21일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진행된 양국 지도자의 만남 중 다섯 번째였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최근 1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국가주석이 이웃 국가를 방문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시작해 네 차례나 중

국을 방문했다.

북한과 중국의 관영언론들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일치가 이뤄졌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지역 정세 속에서 양국이 전략적인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논평했다. 2019년 10월로 다가오는 북·중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맞아 양국은 상호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교육, 보건, 인력 양성 및 관리, 농

업, 언론 분야의 협력, 지방 정부 기관의 상호 교류 등과 같은 분야가 우선적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회담 과정을 지켜본 옵서버들의 견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매우 촉박한 일정 중에 평양 방문을 위해 짬을 낸 이유가 단지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그것은 북·미 대화 중지에 따라 발생할지 모르는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이다. 북한이 계속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위협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경우 새로운 긴장이 증대되고 정세가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있다.

이점과 관련해 현재 북한 지도부의 계획과 의도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북한이 발표한 모든 공식 성명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중대한 제안’을 했지만, 미국 측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지금 북한은 어떠한 추가적인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근본적인 미국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것이다. 올해 말까지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북한은 어떤 ‘다른 노선과 행동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침묵하는 데에는 북한이 제시한 양자택일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대화 파트너인 미국과 한국을 향한 호전적인 수사와 다양한 종류의 비난이 나오고 있다. 북한 측이 아직까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긴 휴식기를 가진 후에 2019년 5월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다는 것이 특

별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핵무기 완성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중국 측이 고려하는 중요한 과제는 북한 지도부가 핵 문제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까를 가늠하는 것이었다.

중국 내 분석 기관들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결과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로 요약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확실하고 영향력 있는 친구이자 일종의 ‘보험’이다. 그 덕분에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정치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중국의 ‘선의의 충고’를 귀담아듣고 인내심을 발휘해 무모한 행보를 피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만 가능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은 ‘부전(不戰)’, ‘불란(不亂)’, ‘무핵(無核)’의 3원칙에 입각한다. 중국은 한반도와 관련된 현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나 여타 이해 당사국인 미국, 러시아,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나 같은 노선을 고수할 것이다.

언론에 발표된 시진핑 주석의 발언들로 판단하건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중국은 북·미 간의 평화적인 대화가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화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도와줄 용의가 있으며 심지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의 압박’ 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 그리고 모든 노력과 자원을 국가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부드럽게 그러나 끈기 있게 표명해왔다. 중국은 북한의 안전 보장과 발전을 도와주고자 자국의 개혁과 경제 개방 경험을 나누어 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결되지 않은 핵 문제가 이러한 행보에 장애가 되고 있고, 현 단계에서 본격적인 협력 강화는 대북제재로 인해 제한받고 있다.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 지난 시간 동안 주위 현실에 대한 자기 나름의 관점, 때로는 매우 특이한 관점을 가진 북한 지도자와 ‘협력하려는’ 시도가 즉각적인 성공을 가져온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통신의 발표에 따르면 회담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자제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부합하도록 ‘상황을 통제하기로’ 시진핑 주석에게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이해 당사국들’(미국)이 대화 진척과 서로의 정당한 우려를 고려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과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중립적인 어조로 표현했다.

정상회담 결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반향을 야기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정치와 경제 관계에서 북한을 자국에 더 밀착시키기 위해 출구 없는 북한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주전 선수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대미 무역 분쟁과 지역 현안들을 논의하는 데에 ‘북한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런 견해에 대해 중국은 대미 무역 마찰과 북핵 문제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히 반박한다. 중국 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반도의 평화, 안보, 안정은 중국에나 미국에나 똑같이 중요한 문제다. 다른 문제들과 연계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시도는 ‘벼랑 끝에서 균형잡기’와 같은 것으로, 중국 측은 이것이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됐던 간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지지부진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 강대국들의 심각한 우려와 관련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미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대립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2019년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 문제가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모든 국가의 정상들이 여기에 모여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만들 것이다.

러시아 외교부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공동 행동계획은 이미 2017년 7월에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했던 공동 로드맵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 구상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주

요 파트너들이 이 구상을 공동으로 검토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이 구상을 알리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번역: 김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올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Встреча Си Цзиньпина и Ким Чен Ына в Пхеньяне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9년 6월 23일)

# 러시아의 산업정책을 활용한 남-북-러 3각 산업협력 추진 방향

김학기

## 문제제기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한-러 정상 간에도 여러 차례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진행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러 3각 협력사업 관련 내용이 공동성명문에 명문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러 당시의 ‘한-러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러 간 3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북한의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4차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서 인프라, 에너지, 기타 분야에서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안은 한반도 정상화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협력 시대 도래 및 한-러 양국 간 합의 사항 이행에 대비한

한-러 및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을 새롭게 준비해 나갈 때다. 본 글에서는 2015년 이후 북-러 협력관계와 최근 러시아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남-북-러 협력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본다.

## 제4기 푸틴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극동개발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인 2014~2015년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 핵심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입 대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부문별로 2020년까지 러시아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품의 비율(수입 침투율)을 전 산업에 걸쳐 10~20% 줄이려는 계획을 책정했다. 2016년을 전후해서는 ‘수출지향 수입 대체’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다. 최근 푸틴 정부가 중시하는 러시아 산업정책의 하나는 ‘비자원 수출’ 확대다. 러시아 정부는 투

본 자료는 ‘러시아의 산업정책과 남-북-러 3각 산업협력’(산업연구원, 2018) 보고서를 요약수정·보완한 것임.

표 1. 2024년까지 러시아의 전략과제 12개와 공간발전전략 주요 내용

전략과제		주요 과제
1	인구	병원 현대화, 체육시설 확대
2	보건	전 국민 건강진단, 제약산업 진흥, 의료 서비스 수출
3	교육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직업교육 현대화
4	주택 및 도시 환경	주택 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5	생태계	폐기물 관리, 식수 개선, 대기 오염 감축
6	도로	도로 건설 확대 및 개선, 디지털 교통시스템 도입
7	고용 및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 증대,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솔루션 이용
8	과학	세계적 과학연구센터 창설, 특수 과학 시스템 구축
9	디지털 경제	고속데이터 전송망 구축, 디지털 경제 기술 및 플랫폼 솔루션 도입
10	문화	문화-교육 및 박물관 단지 조성, 극장 현대화, 가상 콘서트홀 개설
11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 플랫폼 창설, 조달시스템 개선
12	국제협력 및 수출	비자원비에너지 분야 수출 확대,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비석유 부문 국제경쟁력 확보
공간 발전 전략		블라디보스토크~서부국경 수송 시간 7일 내로 단축, 시베리아 횡단철도 수송능력 1.5배 확대, 북극해 항로 수송량 확대, 대도시 간 고속 및 초고속철도 기반 조성,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 개발, 분산형 전력 개발

자료: '5월 대통령령' 내용 요약.

자유치 확대를 위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의 투자 환경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5월 7일 취임식 당일 “2024년까지 러시아연방 발전의 국가목표와 전략적 과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표했다. 동 ‘5월 대통령령’은 제4기 푸틴정부 6년간 (2018.5~2024.5)의 국정과제를 범제화한 것으로 9개 국가발전과제와 12개 전략과제, 공간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을 국가 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극동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의 경제특구 외에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새로운 형식의 경제특구 제도 시행과 더불어 ‘극동 헥타르’ 등의 정책도 본격화했다. 아울러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 있는 ‘루스키 섬’을 러시아 디지털 산업 센터로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루스

키 섬 개발 방향은 과학 및 연구·개발 센터 설립이며 사실상 디지털 경제가 핵심이다.

극동개발 정책의 핵심 과제는 2개다.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과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한 인구 증대 정책이다. 극동개발 정책이 투자유치 등의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극동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은 여전히 낮아 모스크바 등 서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다. 극동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극동개발에 필요한 노동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극동지역 주민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극동 1ha 법’ 시행과 더불어 북한 노동력 등 외국인 노동자 유치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 북-러 간 경제협력과 대상 분야

북한과 러시아는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

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약속했지만, UN의 대북 경제 제재 등으로 2017년 교역 규모는 6,200만 달러 수준으로 오히려 크게 축소됐다. 그중 북한의 대러 수입은 2010년 이후 약 0.7~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7년은 4,580만 달러에 그쳤다. 북한의 대러 수출은 수입 규모보다 매우 적지만 2013년 이후 조금씩 늘어나 2017년에는 1,640만 달러 수준이 됐다.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입 품목 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특정 상품에 집중돼 있다. 북한의 대러 수입품 대부분은 석탄과 석유 등 광물성 연료제품이고 기계류와 철강제품도 일부 수입된다. 2017년 기준 북·중 무역 규모는 북·러 무역 규모의 약 80배에 달한다. 북·러 무역 및 북·중 무역에서 북한은 지속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투자는 2008~2013년 기간 동안 조금씩 늘어났으나 UN의 대북 제재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북한으로부터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액 잔액은 부동산 운영 분야에 대한 약 400만 달러가 전부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는 나진·하산 간 철도 공사가 진행된 2011~2012년에 집중됐다. 2013년 이전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일부 이뤄졌다.

2016년 3월 2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16년 2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을 금지했다. 석탄 수출과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도 중단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로 북한의 해외 이주 근로자들은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해야 한다. 북한 노동자의 송환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며 특히 1만 명 정도가 일하는 연해주 등 극동지역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 대책으로 사실상 북한 근로자들의 러시아 체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러 정부 간 경제협력 움직임은 2014년부터 확대돼왔다. 2015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북한과 러시아 간 제7차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 회의에서는 북·러 간 전력공급, 자원개발, 철강 생산, 교통 인프라 및 물류 시스템 구축, 농업분야 협력, 무역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을 전후하여 북·러 간 논의되던 각종 경제협력 프로젝트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UN의 대북 제재에 러시아가 동참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2018년 들어와 한반도의 평화 움직임에 힘입어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움직임도 재개되고 있다.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북·러 정부 간 주요 논의 대상은 교통 물류, 전력공급, 자원개발, 교역 증진 등이다. 먼저 교통 물류 분야의 경우 북한 철도를 시베리아철도 및 바이칼-아무르철도와 연결, 북한 철도 현대화, 한반도 철도와 시베리아철도 연결 프로젝트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며, 북·러 양국 간 교역 증진을 위해 두만강 국경 지역에 트럭 왕래가 가능한 자동차용 교량 건설, 자동차 검문소 설치 문제 등도 검토되었다. 전력 분야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대한 전력공급, 북·러 국경 지역 풍력발전소 건설 등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북한 광물자원의 개발, 동해 및 서해 대륙붕에서의 원유와 가스 탐사, 정유공장 현대화, 철강 생산 분야 협력 문제

등이 거론됐다. 교역 증진과 관련해서는 북·러 양국 간 출입국 비자 간소화, 러시아 내 북한 상품 판매소 개설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무르주, 연해주 변강, 하바롭스크 변강 등지에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통한 북한 농업단지 설립, 돼지농장 설립, 북·러 협력에 의한 다시마 통조림 생산 등 농수산물 분야 생산 협력도 일부 진행된 바 있다.

###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 전략과 방향

남·북·러 협력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러시아 측의 협력 유도 등의 지정학적 필요성, 남북을 잇는 각종 수송망 연결로 얻게 될 남북한의 경제적 효과, 극동지역 및 유라시아 시장 진출에 따른 성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UN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과 남북 협력관계 추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남·북·러 협력사업을 발굴해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협력 과제들은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과 전략과제, 극동개발정책과 북·러 간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먼저, 푸틴 정부의 12개 전략과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제4기 푸틴 정부가 추진하는 2024년까지의 경제정책은 국가목표와 12개 전략과제 이행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남·북·러 협력도 러시아의 12개 전략과제를 활용할 경우 러시아 정부 측의 자원과 가용 자원 활용에 효율적일 것이다. 푸틴 정부의 12개 전략과제와 산업정책 방향, 산업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남·북·러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는 12개 과제 중 ① 식품 가공

④ 주택 건설과 사회 인프라 건설 ⑤ 바이오산업 ⑥ 도로 및 철도 건설 ⑨ 디지털 경제 ⑩ 문화 및 관광 ⑫ 수출상품 생산 등이다. 분야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플랫폼 구축 등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극동개발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가공산업 육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회 인프라 및 수송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극동개발과 연계된 프로젝트 중에서는 소규모 투자로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수산 식품 가공, 수산양식, 주택 건설, 목재 가공, 자원 1차 가공,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환경, 관광 분야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북·러 양국 간 협력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UN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남·북·러 협력이 본격화되면 북·러 간 무역이 크게 늘어나고 교역품목도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간 투자도 대상 분야가 좀 더 다양화되면서 증가할 것이고 남·북·러 3각 협력에 의한 상호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극동지역에서의 기존의 북·러 관계 등을 활용하여 남·북·러 3각 협력사업으로 추진할만한 유망 프로젝트는 농산물 가공, 광물자원, 목재, 수산, 건설, 과학기술 환경, 임업 분야 등이다.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자원과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중국 내 수나 한국과 일본 등지에 수출하는 분야 역시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로 전환시킬 수 있



는 유망분야가 될 수 있다.

UN의 대북한 제재가 일부 완화될 경우 러시아 극동개발 등과 연계지어 성공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부터 먼저 추진해 나가야 한다. 시범사업들이 빠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UN의 대북 제재 해제 이전이라도 남-북-러 3국 협력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장치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분야로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경제 분야, 농업 및 식품가공, 수산업, 수산양식, 수산식품 가공, 조선, 어선 건조, 수리 조선, 수송 및 사회 인프라 건설, 문화·관광 등이 유망하다.

## 맺음말

2019년 9월 4~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5회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됐다. 푸르트네프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 대기업 440개사, 언론 1,300개사 대표를 포함하여 8,500명이상이 참여했다. 외국에서는 일본(588명), 중국(395명), 한국(285명), 인도(204명) 측의 참가자가 특히 많았다. 서명된 합의 문서는 270건, 금액은 3.4조 루블 상당으로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2015년 80건, 1.3조 루블, 2016년 200건, 2조 루블, 2017년 217건, 2.5조 루블, 2018년 175건, 3조 루블)

동방경제포럼 참가국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중심에서 인도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푸틴 대통령과 함께 건설중인 즈다조선소를 시찰하고 루스키 섬에서 양자 회의를 개최하여 군수산업, 원자력, 우주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극동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는 10억 달러의 크레딧 라인 개선을 약속했다. 아울러 인도와 유라시아 경제동맹 국가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러일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된 북방 4개 섬 중의 하나인 시코탄섬에서 러시아의 수산 가공 공장 및 냉동창고 건설도 본격화됐다. 우리나라의 극동 진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냉동창고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에서 시코탄섬의 공장 시공식은 극동지역에서 한-러 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러 프로젝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핵 문제로 한-러 및 남-북-러 간 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프로젝트들은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 업체들의 투자 확대로 점차 우리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극동지역의 신형 특구 우대 제도와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러시아가 아시아의 경제 가치 사슬에 신속하게 편입한다는 개발 초기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스타트업 육성 등 극동개발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 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9월 5일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에서 2005년에 비해 극동지역의 인구 유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완전히 멈추기 위해서는 극동 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극동개발의 중점 과제로는 젊은 층에 대한 지원(연리 2%의 대출에 의한 주택 구입 보조), 의료 상황 개선(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화 시설·이벤트의 리뉴얼,

하이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관광업의 발전 등이 강조됐다.

그런 방향에서 볼 때 포항시와 블라디보스토크 시 테크노파크 간에 체결한 협력 약정이 실질적인 사업확대로 확대 발전될 수 있다면 양국 사이에 좋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 작게는 테크노파크 간의 협력에서부터 시작해 남북 협력에 의한 수출형 ‘남-북-러 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최종적으로는 블록체인산업과 연계된 디지털 네트워크와 교통, 물류 시스템 등으로 정비된 ‘한국형 스마트 산업단지’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명실상부한 유라시아 진출 거점 확보를 위해 ‘한국형 스마트 산업단지’ 인근에 남북한 및 고려인 집단 거주를 유도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형 스마트 산업단지’가 통일 한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 공급지 및 유라시아 시장 진

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한 및 한국 내 산업단지들과 연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자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투르트네프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6,000억 루블 이상 투자했다. 그중 80%가 러시아 기업들에 의한 투자다. 중국의 대규모 극동지역 사업, 일본의 야쿠츠크 시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 인도의 참여 등으로 볼 때 러시아 극동지역 내에서 남북한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기회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북·미, 미·중, 미·러 관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남북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남-북-러 3각 경제협력 방안을 서둘러 추진해 나가야 한다.

---

# 북·미 판문점 회담

---

올레그 다비도프

---



(photo by CSIS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www.flickr.com/photos/csis\\_er/](http://www.flickr.com/photos/csis_er/))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길어진 정치적 휴지기 이후 한반도 상황이 다시 긴박해졌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뒤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중요한 단계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있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김

정은 위원장에게 '서로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기' 위해 판문점에서 짧은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외교의례 전통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제안에 사실상 즉각 동의를 표했고, 6월 30일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물론 SNS를 통한 국가 지도자들의 즉흥적인 연락에 따른 만남은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대화에 상호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일종의 객관적 사실로 분명해

진 것 같다.

성사된 만남은 이례적인 상징으로 가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경계선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까이 다가가 김정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그리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가 남측으로 되돌아올 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했으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곳에서 귀빈들을 맞이했다. 바로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짧은 회담이 이루어졌다.

바로 얼마 전까지 북-미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북한 외무성과 언론은 워싱턴의 입장이 북한에 '적대적'이라며 극도로 거친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했다.

이 상황에서 북-미 대화는 미국 측의 원칙적 접근법의 변화 없이 '저절로'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 강조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5월 실시한 미사일 실험에 대해 북한이 내실 있는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호 간의 격한 논쟁이 다소 누그러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서신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최근에 들어서다.

두 정상외의 판문점 회담 결과는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정치쇼라는 인상을 주었다. 탁월한 두 배우가 능숙하게 서로의 비위를 맞춰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방북을 '전 세계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 일컬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자신의 주요 대외정책 업적에 한반도 평화 유지도 포함시켰다. 만약 오바마나 그 추종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한반도는 지금쯤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뒤지지 않았다. 그는 양국의 지도자가 슬픈 과거를 종식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건설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서로 간의 초대가 뒤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백악관 방문을 제안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당한 때가 오면' 평양을 방문해 달라고 제안했다.

향후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나중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 중순에 재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북-미 실무협상이 비핵화라는 협소한 주제를 다룰 것인지 아니면 북-미 관계 및 한반도 평화 유지와 관련된 보다 더 광범한 범위의 문제들을 의제에 포함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남한 영토에서 중요 행사들이 진행됐지만 남-북-미 3자 대화나 실질적인 남북 접촉은 없었다. 판문점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직접적인 참여자라기보다는 관찰자 내지는 협상장의 주인으로 그곳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자신의 개인적 정치 자산을 투입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부터 북한이 남측과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다. 일례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의사 일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북한은 지금까지 답을 미루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2018년 4월과 9월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남북 경제-무역 및 여타 분야의 관계 발전과 협력에 대한 남측의 의무를 한국이 온전히 이행하

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한 제약을 이유로 든다. 북한은 이것을 믿을만한 논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매우 신랄하게 북·미 대화를 '중재'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을 거부했다. 북한은 북·미 대화에 조력자는 필요치 않으며 양측은 끼어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현재로서는 북·미 판문점 회담의 결과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대중을 겨냥한 각색된 무대와 효과적인 성명이 판문점 회담의 내용을 흐리게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점을 고려하면 대화가 특별한 문제 없이 재가동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화 과정이 어떤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 어떤 궤도를 따라 움직일 것인지 현재로서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

다수의 옵서버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회담을 통해 자신에게 중요한 국내의 정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거나 혹은 최소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계와 유권자들에게 그가 한반도 상황이 퇴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상황을 통제 하에 둘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 비핵화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유일한 초강대국의 호의를 사고 있으며 모두가 자신과 대화하기 원하는 강력한 리더임을 보여주려 했다. 이로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일부 엘리트 계층이 품을 수 있

는 김정은 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고, 그가 경험 많고 노련한 대화 상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양측이 제시한 단기 목표는 달성된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관련된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은 전혀 간단치 않은 일이다. 판문점에서 양측은 이견에 대해 말하기를 피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규모와 심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조치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양측 간의 근본적인 대립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

모든 상황이 현 단계에서 양국이 절충 가능한 분야가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은 제한적인 일부라도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력'으로 보유하기를, 그리고 이 경우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로 규정된 매우 고통스러운 모든 제재의 철회를 얻어 내기를 끈질기고 단호하게 고집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작전을 펼칠 공간이 극히 제한돼 있다. 의회의 상당수 의원들과 정보기관, 유력 언론들, 일련의 굵직한 분석 기관들, 심지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물들조차 그의 대북 화해 노선을 반대하며 끊임없이 그의 대북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에 반하여 북한이 핵무기의 일부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아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달리 말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적인 문제에서 본질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 측의 압박과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는 미국 정계 측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며 북한과 포괄적인 합의로 가는 방안은 현재 실현 가능성이 적다.

그런 까닭에 백악관의 수장은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행보를 공격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모라토리엄을 지키고 있는 현 상황을 가능한 한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북한 지도부가 이와 같은 양자택일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난관에 부딪친 현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해결이 본질상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두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 간 개인적 관계와 그들의 야망과 감정에 달려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의심할 바 없이 유익했다면, 주제가 심화된 지금으로서는 이런 방식에 내재된 실현 가능성 부족과 한계로 인해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번역: 김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올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О встрече Д.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в Пханмунджоме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9년 7월 2일)

---

# G20 정상회의, 그리고 푸틴-아베 정상회담

비탈리 슈빗코

---



얼마 전 오사카 'G20' 정상회담 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났다. 기자들이 일일이 세어 이야기했듯이 벌써 26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이 회담은 중요했다. 회담에서는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킬 시끌벅적한 성명은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 지도부가 대일관계에서 스스로 설정해 놓은 가시적/비가시적 과제들 중 몇 가지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달아야 하지만 말이다.

첫째, 아베 총리는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고 좀 더 강경한 러시아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러시아는 2년 전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말하는 남(南)쿠릴열도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반드시 유지한다는 러시아의 기본입장이 회담의 결과로 완화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현재, 이런 완화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 국영매체마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남기려 하지 않고 있다.

“쿠릴열도의 사회기반시설 위에 필적하고 있는 러시아 국기를 결코 내릴 계획은 없다”는 매우 단순하고 명백한 푸틴 대통령의 성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공식으로 천명한 것은 일본의 입장이 최근 몇 년간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양국 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문제와 더불어 새롭게 영토의 경계를 확정하는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외교부는 일본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문제, 특히 중국이 공해에서 자국의 존재를 확정하는 문제나 미국이나 주변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전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되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활동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외교채널의 의제 중 하나로 삼으려 했으나, 러일 정치회담 일정 중에는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루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러일 오사카 양국정상회담에서도,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는 최근 러일 국방 및 외교장관회의(2+2 형식)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러시아 측이 회의 의사 일정으로 제안한 주제에 중국은 없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예전과 같다. 북한 지도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 단계를 밟을 때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부분적으로 철회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는 평화조약을 의제의 중심으로 놓고 이와 관련된 여타 트랙, 즉 경제 관계, 군사 분야 접촉, 교육, 환경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

의 논의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의제로 삼은 회담 과정에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함께 묶는 방식은 과거부터 이어온 러시아의 회담 진행 방식이었으나 일본의 접근 방식은 아니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이런 태도는 야당뿐만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아베 총리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넷째, 일본 정부는 러시아 기업의 에너지개발 프로젝트에 자국 회사가 참여하는 것을 정치적 이유로 제한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입증했다. 계약에는 ‘미쯔이,’ 합병을 앞두고 있는 국영기업 JOGMEC, ‘미쯔비시’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서구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이 형식적으로나마 제재로부터 탈퇴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북극 지역 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러시아 산 액화천연가스의 대일 수출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예의주시하는 부분에 일본기업이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러시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려는 미국의 제재를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서는 무력화할 수 있음을 뜻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

사실 공공분야 이외의 상황은 보이는 것보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아베 총리가 급격한 행동이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대신 “일본은 조용하고 평온하게 평화조약체결 문제를 러시아와 계속해서 협의해 가야 한다”고 의회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



을 향한 의례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발언은 더 진지하게 받아들  
여져야 한다.

번역: 김은희, 청주대 학술연구교수

loveruli@hanmail.net

- 비탈리 슈빗코(V. G. Shvydko) IMEMO 일본 경제정치부장
- 원제 : О встрече Путина и Абэ на саммите G20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9년 7월 3일)

---

#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 오사카 라운드

---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기대되던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됐다. 회담 결과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 ‘당분간,’ 이미 실행된 관세 인상 이후 남은 중국의 대미 수출 3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인상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역합의서 체결을 위한 회담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안보 관련’ 사항들을 제외하고 화웨이에 미국 기술

설비 판매 금지를 부분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가까운 미래에 무역 합의서에 중국이 조인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목록에 준해서 미국 상품, 우선적으로 농산품의 수입을 ‘기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제경제의 자유주의 노선을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대외에 분명하게 심어주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이 중국에 제기하는 요구들을

많은 부분 반영하는 새로운 발의안을 G20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다. 그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 광업, 가공업, 서비스 분야에서 향후 시장개방 확대
-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확대, 비관세장벽 제거, 국제협력 생산 체인에서 '수입 링크'의 비용 절감
- 2020년 1월 1일부터 외국투자자와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안 발효,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기업에 대한 '포괄적 폐지'를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
- 중국과 EU(유럽연합)과의 투자 합의서, 중국-일본-남한 간 자유무역합의서 체결을 위한 회담 강화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회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갈등을 잉태하고 있다. 하나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율조정 문제이다. 이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5세대 통신 관련 새로운 통신설비 표준 도입과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신(新)글로벌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문제에서는 타협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왜냐하면 중미 관계의 기저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의 주요 원인이 무역관세율이나 중국투자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 예컨대 세계전략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립에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즉 세계시장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과 이런 과정

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규모와 이를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일대일로' 전략 메커니즘은 오늘날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을 위협할 정도로 막대하고 전략적이다. 미국의 여러 전문가와 정치가들은, 넓은 의미로는 무역·투자·군사적 차원에서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세계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권위주의 정치를 표방하는 중국의 힘을 미국이 현실적으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향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런 관점에서 몇몇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국정치 상황과 무역 '마찰'이라는 주제를 연관시켜 전체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중국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위주의는 중국에 대한 무역 압력의 수위를 강화하라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압박의 빌미를 미국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중반, 5세대(5G) 이동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십억 디지털 경제 글로벌 시장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중국 하이테크놀로지 회사들(화웨이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전통적인 중국 수출의 경우에서처럼 이미 단순히 관세율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다. 중·미 기술 동반자 관계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포괄적인 금지차별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 금지를 자국의 국가안보라는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계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최신 분야에서 절대적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곧 '안보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이 현 미국 지도부의 생각이다.

기술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 대중매체가 언급하기 시작한 ‘디지털 냉전’에서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관세율 문제와 ‘마찰’의 핵심 쟁점이 뒤섞이는 상황은 포괄적 타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혹시 관세·투자 문제에서 타협이 가능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전략적 기술 주도권 투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이제 중국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이라는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타협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중국은 대(對)미 접근 전술을 바꾸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관세율, 미국 상품 구매 확대, 중국 투자법 자유화 등의 분야에서 중국은 양보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강성전략을 구사한다. 예전처럼 타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국내 경제법을 바꾸면서 미국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법적 의무를 지는 합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등에서 보듯이 미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중국의 자국 내 논의에서는 더욱 신랄한 지적이 나타난다. “우리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버텨서 이겨낼 것이다,” “우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합당하게 응답하도록 만들 것이다.”

아마도 미국과의 타협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국가 수립 70주년을 맞아 중국은 “우리는 어떠한 국제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예전 노선을 고수하면서 거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파괴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식의 중

국의 지난 성공과 파워를 결합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이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한 앞으로 몇 달 동안, 인권과 소수민족 문제를 빌미로 한 중국 비판, 대만과 미국의 군사협력, 남중국해에서 미군 주둔 등 중국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행동에 대해 중국이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공격적으로 나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중반 무렵에 가서야 미국과 타협이 가능하리라고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예측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성공적으로 대외정치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며 그 시기가 2020년 중반 무렵이라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세계 패권투쟁이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한 것을 놓고 중국, 미국,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활발하고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 중국으로 하여금 대(對)미 기술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5G 기술의 고유 실행체계와 설비를 개발하도록 부추겼다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실수했다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이 기술 의존에서 ‘해방’됨으로써 미국이 최첨단 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우위와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성을 초래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그들은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중국이 자신만의 5G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은 어쩌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간의 간격을 이용하여 미국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굳힐 것이고 훨씬 더 선진적이고 비약적

인 기술로 옮겨갈 것이 분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은 유지될 것이다.

또 다른 논쟁거리는 중·미 무역 분쟁이 향후 세계화, 경제자유화, 자유무역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혹자는 ‘글로벌화와 자유화의 위기’를 말한다. 또 다른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공격적인 경제 외교 제재정책이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 자유화 조치들을 취하도록 추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현실에 좀 더 부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규범을 채택하도록 세계 각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세계경제의 재(再)글로벌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땅 다지는 작업’을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된다.

미국과의 타협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마찰’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상쇄하려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도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북경, 상트페테르부르크, 두산베, 오사카에서 이루어진 최근 러·중 정상회담은 러·중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며 전략적으로 실효성을

갖고 있음을 미국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중·미 ‘마찰’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러시아는 대중 관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소위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이 현재 착수하고 있는 전략 개발과 실행 방향에 맞춰 중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가장 전망이 높다. 또한 러시아는 여러 중국 시장 중에서, 예를 들어 대두나 여타 농산물 시장에서 미국이 퇴장하면서 생긴 중국 시장 내 빈틈을 공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러시아의 대(對)중국 수출 구조가 원료 중심적이라는 점과 러시아의 대(對)중국 투자가 낮다는 점은 문제가 된다. 현재 중·미 관계를 고려할 때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더 많은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서도 그들은 러시아 상품, 러시아 자본, 러시아 기술이 중국 경제에서 미국의 상품과 기술이 퇴장하는 경우 그 양과 질에서 중국의 손실을 얼마나 메워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번역 : 김은희, 청주대 학술연구교수

loveruli@hanmail.net

· 바실리 미헤예프(V.V. Mikhe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 세르게이 루코닌(S.A. Lukonin) IMEMO 중국 경제정치부장  
· 원제 : Торговая война Китай – США: Осакский раунд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9년 7월 1일)

---

#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

---

올레그 다비도프

---



한반도 군사·정치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오랫동안 한반도 정세를 연구한 전문가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핵문제 회담을 재개하자고 합의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이후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상황은 또 다시 눈에 띄게 악화됐다.

남한에서 정기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미국과 남한 정부의 결정이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불고, 대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이후 동맹국들은 북한을 자

극하지 않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단계적 과정을 준수하도록 유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군사훈련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봄 예정되었던 ‘포울이글’이나 ‘키 리졸브’와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이 취소되었다. 대신 훨씬 ‘완화된’ ‘동맹’ 훈련이 실시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여름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사령부 훈련으로 교체되었으며 훈련의 핵심 역시 방어적 성격의 작전들

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하는데 맞춰졌다. 훈련 기간 역시 10일로 축소되어 8월 11일에서 2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응은 뜻밖에도 강경했다. '군사침략 연습'을 한다며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여러 유형의 단거리 미사일을 연속해서 발사했다.

7월 25일부터 8월 16일 사이 북한은 10여기 이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여기에는 탄도 미사일, 유도 미사일, 사정거리 200~700km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등이 포함된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평론가들은, 북한이 합동훈련을 빌미로 삼은 것은 단지 눈속임용이며,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새로운 미사일기술 모형을 실험해보기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북한의 조치에 미국과 남한이 취하는 태도가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위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반면 한국은 이런 북한의 행동이 국가안보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징후라고 여긴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현 단계 북한이 원격 단거리 고체연료 미사일 발사 기술을 완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역량 강화에 북한이 매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남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능력으로는 포착하기 힘들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벌이고 있는 미사일 실

험이 핵문제 협상 과정에서 이탈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8월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친서'라고 말한 바로 그 친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핵 문제 관련 대화가 곧 있을 한미 군사훈련이 종결된 후 바로 재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이 이처럼 대외적으로 빈번하게 접촉하고 하는 상황과 달리 남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강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남북한 관계를 담당하는 북한 조직)의 8월 16일자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남북한 대화가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논의할 주제도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남한 정권과의 협상 테이블에 더 이상 마주 앉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발언들은 남한 최고지도부를 향한 개인적이고 모욕적 비난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작년에 세 번의 정상회담을 끌어낼 정도로 전례 없이 상승했던 화해 분위기가 이렇듯 경악할 수준으로 바뀌게 된 배경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실망한 가장 큰 이유는 남북한 정상이 서명한 경제협력 재개 및 공동합의안 등을 남한이 실행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된다. 유엔 안보리의 포괄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남한의 논리를 북한은 납득할 수 없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부터 탈피하여 한반도 문제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남한이 간접적으로 인정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할 때 북한 관련 대화가

계속될지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로 복잡한 선택들을 주고받고 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상에 근본적인 차이가 그 둘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영변의 중요 핵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북한에 가해진 모든 경제제재들을 조기에 철회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고집하고 하고 있다. 반면 미 행정부는 '큰 거래'를 맺으려는 구상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 활동, 즉 축적된 핵분열 물질과 탄두 설비 및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채택하는 것이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북한과 부분적 거래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지도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경우에만 제재 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미국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지난 반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막대한 정치자금을 투자하였으며,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화해와 개인적 우정 쌓기에 집중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북한이 그 기간 동안 핵 잠재력을 유지·개선할 수 있게 해준 '나쁜 거래'라는 점에서 정적들의 거센 비판을 불러올 수 있는 자살행위이기도 하다.

대통령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결정할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합의서 조인은 미 행정부의 승리로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는 좋은 선전수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대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합의서 도출은 대통령선거 준비일정 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물론 북한으로 하여금 모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계속 묶어두는 전략은 미국에게 여전히 당연한 과제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외교정책과 적당한 압력을 결합하는 노선이 미국의 안보위협 요소를 줄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북한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와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비록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모라토리엄 연장에 불과할지라도, 미국 유권자들로 하여금 현 행정부의 대화정책 노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마냥 늘어진' 시나리오가 미국에게는 상대적으로 매혹적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정중하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에게는 실효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생존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국제 제재를 얼마나 신속하게 철회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북한 정권이 당연한 실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이 각자 나름의 목표와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양국은 향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번역: 김은희, 청주대 학술연구교수

loveruli@hanmail.net



- 올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Новые ракетные испытан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9년 8월 19일)

---

# 러시아와 아태지역에 대한 단기 전망

---

바실리 미헤예프

---



Vladivostok. Russky Island. Russky Bridge. Photo by Alexxx Malev // [www.flickr.com/photos/alexxx-malev](http://www.flickr.com/photos/alexxx-malev)

9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단기적인 아시아-태평양 전망을 논의하는 동방경제포럼이 열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싶다.

아태지역에서 러시아는 당연히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는 이 지역에는 지역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 요인들이 더 강하다. 그러므로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정적 요인은 국제관계 분야에서 나타나는 좋지 않은 동향이다. 러시아-아태 지역 간 상호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는 악화되고 있는 러미 관계이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통제 시스템을 훼손시킨다고 서로를 비난한다.

러미 관계의 부정적인 역학 관계는 러시아와 주요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정치적 동맹이 그들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미국과 러시아의 좋지 않은 관계는 러시아와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에서는 과거 유망하게 여겨졌던 러일 에너지 협력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일본이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을 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러한 협력 관계를 부정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투자 및 금융 면에서는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미국의 반러시아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해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해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 악화 및 그 뒤를 이은 중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아태지역의 두 주요 ‘협력 및 경쟁 국가’들의 정치적 관계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무역 관세 문제와 전략적으로 유망한 세계 정보통신 기술 시장에서의 ‘5세대(5G) 주도권 싸움’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아태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의 경제는 상호 연결된 생산 사슬과 경쟁 논리를 통해 중·미 ‘대립’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계적 불황의 위협이 점점 더 느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의 불확실성은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이는 특히 NEA-3(중국, 일본, 한국), ASEAN+ ...(+중국, +일본, +한

국), TPP-11 등의 형태로 지역 다자간 협력의 미래와 중국의 ‘보완적’ 행보 가능성과 관련된다.

아태지역에서 다자간 경제 형태 발전 둔화와 관련된 요구에 응하여 중국이 유라시아 공간에서 실크로드 및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의 지정학적 공간을 통한 해양 실크로드 방면의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중·미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적 관계에서 미국과 관계된, 다시 말해서 실크로드와 해양 실크로드 속 중국 협력국들이 새로운 중국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은 지역 내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쥐려’ 하며 ‘팽창주의를 증대’시키고, 실크로드와 해양 실크로드의 협력 국가들을 이른바 ‘빛의 함정’에 끌어들이며 결국에는 중국에 ‘종속시키려’ 한다는, 중국에 대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미국 측의 비난을 불가피하게 고려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관계를 자제하는 형태로). 이렇듯 아태지역 정치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된 문제들과 역사적 분노가 첨예화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부정적 요인이다.

또 다른 지역적 불확실성은 한일 경제 관계의 악화와 관련 있다. 서로를 무역 호혜국 대우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모든 지역 협상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태지역에 제2차 ‘무역 전쟁’의 역사적, 정치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 동북아 3개국의 주요 안보 위협이 있다. 그 해결(또는 해결의 부재)은

북핵 무기가 공격적인 잠재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는 테러집단의 수중에 들어갈 위험을 초래하며, 지역적 의미뿐만 아니라 핵확산 금지 제도 유지와 국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전망은 없는 것 같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북한 체제 안전에 대한 유일하게 완전한 보장 수단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다른 안전 보장책을 찾는 것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눈에 보이는 이른바 ‘부다페스트 옵션’에 의한 보장은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북한은 카다피와 후세인처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실수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 외에 북한은 핵 폐기를 한다면 그 후에는 인권 보장, 시장경제, 국가 개방 등과 같은 정치 체제 변화가 요구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북한 지도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일부 참가국들이 제안한, 즉 제재 해제와 부분적인 군축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받는 ‘단계적 폐지’ 형태로 나가는 것이 북한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선택을 제안한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핵 방패를 국가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체제 생존의 요소로 보고 있는(이것은 북한의 경우 동일한 것이다) 북한은 그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국제 테러리스트에게 넘길 위험이 남아 있는 한 그 방식은 러시아, 미국, 중국

과 같은 책임 있는 세계 핵 강대국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복잡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인 상황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영향은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즉, 앞서 언급된 것처럼 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5개국 관계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5개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북핵 문제의 중요도는 서로 느끼는 체감온도가 다르다.

남한에게 북한은 국가 안보 문제에서 절대적 우선순위이다. 미국에게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활용될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이익에 관한 문제이다. 즉, 미국에게는 대외정책의 결과나 적어도 그에 대한 전망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과 그 핵무기를 둘러싼 상황은 국가 안전 보장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중요한 것은 대만, 홍콩, 인도, 남중국해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70년대 북한 특수부대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의 맥락에서 보고 있다. 러시아의 근본적인 안보적 이해관계는 미국과의 군사·정치적 관계, 우크라이나, 시리아 남부로부터의 테러 위협과 같은 다른 분야에 있다.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은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 및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해 잠재적으로 규모가 큰 러시아 소비 시장은 전통적인 요인에 속할 수 있다. 아태지역 내 주요 경제국의 혁신적인 투자 잠재력은 중국, 일본, 한국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전

히 러시아 국민들은 마음 속으로 서로 분쟁하지 않고 협력하기를 압도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한국의 '북'과 '남' 정책, 일본의 '인도-태평양 회랑,'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 통합 구상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의 전략적 구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들을 '연결'하는 구상은 장기적 전망에서 다자간 협력과 지역 통합에 대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지경학적 방법을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아태지역의 미래를 조망해볼 때, 우리는 불안한 현재에 더 많이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다자간 형태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적은 것 같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시작했던 것으로 끝맺으려 한다. 가까운 미래에 아태지역 국가들은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외부 영향으로부터 관계를 보호하거나 그 안에 내재돼 있는 긍정적 요인들을 증대시키려 노력

하며, 그 관계에 의지할 것이다. 러시아에게 이런 관계들의 우선순위는 중국이 주요 전략적 동반자 역할로 나서는 식으로 정리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대외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러시아 재계의 눈에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균형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결국 지금까지의 낙관론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및 아태지역에서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양자 관계는 이전에는 대안 없는 구상으로 보였던 '자유무역 지대'라는 전통적 공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경학적 전략'을 바탕으로 한 지역 전체 통합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감히 제안하고 싶다.

번역 : 이성민, 한국외국어대 강사

lsmlsy@hanmail.net

- 바실리 미헤예프(V.V. Mikhe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 원제 : Ближай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сии в АТР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9년 8월 16일)

---

# 중국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양극화된 평가

---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

중·미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논란의 '일대일로'에 대한 평가는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 중국 관료들과 주류 분석가들은 '일대일로'가 공동 번영과 발전을 향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해외 평론가들은 이를 지정학적 도구로 보고 있다. 발다이클립의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교수 겸 IMEMO 아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모순에 대해 밝힌다.

2013년 가을에 '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된 이후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국제사회는 '일대일로'가 경제 프로젝트 추진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제고와 글로벌 거버넌스 및 국제관계 시스템 재편에서 중국의 기회 증대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국이 변함없이 경제 요소를 우선순위에 두며 지정학적 모티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전문가들은 '일대일로'를 더욱 자주 비판한다.

때마침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앞두고 워싱턴의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는 특별보

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일대일로' 차원에서 대중 협력에 동의한 국가들이 직면한 여러 도전이 열거·분석돼 있다. 지분 참여, 장기 임차에 대한 협정이나 다년간의 운영 계약을 바탕으로 파트너국들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중국이 얻어낼 경우, 이들 국가는 '국권 침식'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프로젝트들은 '불투명'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현됨으로써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있으며, 채무국들은 중국의 차관이 버거워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 전문가들이 개별국의 통신망 개발을 위한 중국 기술 활용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묵과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이런 기술이 첩보 활동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이익에 대한 미국의 '보살핌'과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 압박 정책을 분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미국은 압력을 행사해 중국 기업이 통신 장비 생산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에 서는 것을 막으려 한다.

중·미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논란의 '일대일로'에 대한 평가는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 중국 관료들과 주류 분석가들은 '일대일로'가 공동 번영과 발전을 향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해외 평론가들은 이를 지정학적 도구로 보고 있다. 작년 11월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중국의 계획이 용인 불가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축벨트나 일방통행 도로'를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럿 마키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일대일로'를 '중국의 인프라적 허영'의 발로라고 일컬었다. 미군은 '일대일로'를 전략적 팽창의 도구로 보고, 중국 자본이 참여해 건설된 화물항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 해군 기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여긴다.

'일대일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방의 해묵은 프로파간다 낙인인 '중국발 위협'과 '중국 붕괴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혹자는 '일대일로'를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과 군사·정치적 팽창을 위장해주는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이들은 불운한 파트너국들뿐만 아니라, 중국 스스로도 '부채의 덫'에 끌어들이 수 있다는 이유로 '일대일로'가 두 배는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향후 중국이 반드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것이며, 이런

어려움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면 중국은 '일대일로'를 포기할 것이고, 파트너국들은 빈털터리로 남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외신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국내 경제의 발전계획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중국 국민들의 불만을 폭넓게 불러일으킨다는 보도를 연신 쏟아낸다.

'일대일로'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도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분석 보고서나 평론에 의거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은 차관을 통해 파트너국들의 목줄을 쥐고 채무국들로부터 부동산을 앗아간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국민들은 이런 쇠사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일대일로'에 대한 지출이 지나치다고 여긴다.

한편으로 분석가들은 '16+1' 포맷의 대중 협력에 더 큰 기대를 걸었던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을 지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협력 협정에 서명한 이후 중국이 EU에 '분열을 가하기 위해' EU 신규 가입국들을 이용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기존 EU 회원국들은 중국의 투자를 받기 위해 더욱 힘쓴다.

협력 포커스가 빠르게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는 최근에 있었던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협력이다. 2018년에 정권을 잡은 마하티르 총리는 중국 자본의 참여로 부설 중이었던 초고속 철도인 동부해안철도(ECRL)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총리는 계약 체결이 부패를 유발했고, 말레이시아가 프로젝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평론가들에게 있어 '일대일로' 투자의 헨

디캡에 대한 증거가 됐다.

그러나 4월 중순에 말레이시아 당국이 중국 측과 홍콩해 비용을 1/3 낮췄고, 부설 작업이 지속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제 평론가들은 마하티르 총리가 중국에 대해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데 기뻐한다. 이는 실제로 크나 큰 양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중국과 홍콩해 유리한 조건을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례이기도 하다. 해외 평론가들은 이제 중국의 모든 파트너국들이 말레이시아의 선례를 따라 행동하기 시작해 중국은 빈손으로 남게 될 것이고, '일대일로' 프로젝트들로 인해 가난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채무의 덫'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경우에는 지정학이 아닌, 셸을 제대로 하고 비즈니스 이익을 고수할 수 있는 능력이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중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중국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한다.

외국 전문가들은 '일대일로'를 미국의 마셜 플랜과 종종 비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은 서유럽이 붕괴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원조를 제공했다. 주요 모티브는 유럽 대륙에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일대일로'가 정치 및 경제 모티브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교는 표면적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문제는 '일대일로'가 지정학적 경쟁이 부재하고 다른 투자 원천이 없는 국가들에게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전후

유럽에서는 효율적인 시장 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다는 데 있다. 온갖 파괴와 상실에도 불구하고 유럽에는 제도와 법, 규범, 교육 시스템이 남아있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도로와 공장 건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도가 구축되고 국가 운영 메커니즘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곳으로 진출한다. 이는 인내심과 독심을 요구하는 장기적 과제로서 여기에서 중국의 경험은 요긴할 것이다.

'일대일로'는 자선 프로젝트가 아니다. 따라서 서방 세계는 이 이니셔티브가 추진된다고 해서 중국에 불만을 품을 근거가 없다. 미국 당국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약 2조 달러를 쏟아부었고, 일각에서는 지출액이 두 배, 심지어 세 배는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막대한 지출은 개도국에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중국은 같은 돈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진정한 개발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향후 중국과 서방 세계가 공조하는 방법을 배울 가능성이 충분하다. '일대일로'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중국 국영기업에 돌아간다는 외국 기업들의 불만을 잠재울 것이다. 중국 측이 서방 기업들을 기술 개발업체나 (환경보호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공급업체, 하도급 업체나 심지어 도급업체로 부르게 되면, 비판을 위한 근거는 더욱 약해지고, 해외에서 '일대일로'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다.

미국이 20세기에 소련의 영향력에 대응했던 것과 유사하게 21세기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마셜 플랜'을 내놓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런 방향에서 현재 미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메커니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움직인다. 그러나 600억 달러 규모의



이 원조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와 엇비슷하다. 원조는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 투자와 비교하자면 그 일부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런 제한적인 자원으로 ‘마셜 플랜’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 리 없다. 중국의 투자보다 서방 세계의 투자가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말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러시아는 ‘일대일로’ 차원에서 독자적인 대중협력 전략을 구축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제재 여건 하에서 소득원으로서의 중국의 통과 화물을 얻고 중국의 투자를 통해 도로를 부설할 기회는 요긴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결합되면 EAEU 운영 기관 측의 조율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교통 회랑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중국과 EAEU, EU 간 협력은 전 유라시아 대륙 내 공동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결합’의 장 내부에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있다. 기타 과거 소련 국가들과의 인프라 및 투자 계획의 조율을 위해 상하이 협력기구의 메커니즘들을 가동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타협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서처럼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가 유발하는 부채 및 환경보호 문제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

한편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일대일로’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와 오래도록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식 모델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중국 국영기업들의 역할은 자유경제의 지지국들의 바람보다 훨씬 클 것이다.

중국에는 질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음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일대일로’에 대한 접근법을 마련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입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

번역 :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알렉산드르 로마노프(A. V. Roman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원제 : Поляризация оценок китайского проекта Шелкового Пути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9년 7월 22일)

---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인도차이나 벡터 : 메콩강 자원개발 문제와 러시아의 이해관계

---

예브게니 카나예프

---

본고에서는 메콩강 자원개발 문제의 전망을 중국의 메가 전략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이행이라는 맥락 속에서 고찰한다. 우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가동 이전의 메콩강 자원개발 문제의 상황이 다뤄지고, 본 이니셔티브가 이 문제의 향후 전망에 미칠 영향력의 주요 특징이 밝혀지며, 여러 모순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이 구축한 협력 기구들이 평가된다. 필자는 중국이 메콩강 문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관련 문제를 두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키워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메콩강, 식량 안보, 수력 발전, 제도

국제관계·지역학 전문가들 중에 아태지역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언어로 소위 ‘메콩강 문제’라 불리는 메콩강 자원개발 문제는 동남아시아 안보에 주요 도전 중 하나다. 메콩강이 관통하는 인도차이나 반도는 갈등 요소가 첨예화되는 아시아의 두 대국,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다. 중국은 메콩강을 따라 실크로드 경제 벨트의 회랑 중 하나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한 구간을 건설할 계획이다.

메콩강 자원개발은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중국의 메가 전략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기존의 이견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등 자원개발 문제에 새로운 전조를 불어넣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메콩강 문제의 현황과 전개 전망에 미칠 영향력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다.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가동 이전의 메콩강 문제

길이 4,350km의 메콩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나간다. 메콩강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어업과 화물 운송에 종사했고, 이외에 인근 국가들은 전력 산업도 발전시켜왔다.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가동을 천명한 2013년 가을 이전의 메콩강 문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졌다.

첫 번째 특징은 환경과 관련 있다. 메콩강에 건설될 수력발전 시설이 생태계를 바꿔버린 것이다. 그 결과 어족자원의 이동경로가 바뀌고, 강이 만들어주는 주요 비료인 퇴적물이 고갈됐다. 그 결과 토지 생산성이 저하되고, 삼림 벌채, 주기적인 스모그 확산과 같은 고질적인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 특징은 지정학적 성격을 띠었다. 소위 '역외(즉, 동남아 바깥에 위치한) 플레이어들이 메콩강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다. 미국은 2009년에 이른바 '메콩하류유역 계획(Lower Mekong Initiative, LMI)'으로 불리는 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환경 보호와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의 부문에서 인도차이나 국가들 간 협력을 목표로 한다. 2012년 7월에 열린 제5차 LMI 장관회의에서 미국은 '메콩하류유역계획 2020'을 발표했고, 이는 기존의 협력 모델을 리브랜딩한 것이자 협력 부문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계획은 인도와 일본, 한국, 그리고 메콩강 인근에 위치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활성화했다.

그 예로는 2000년에 시작한 메콩-갠지스 대화(Mekong-Ganga Dialogue)와 2007년에 출범한 일본-메콩 지역 파트너십(Japan-Mekong Regional Partnership), 2011년에 시작된 상호 번영을 위한 한-메콩 포괄적 파트너십(Mekong-Korea Comprehensive Partnership for Mutual Prosperity)이 있다. 이로 인해 메콩강 및 이와 관련 문제들이 대규모 역외 플레이어들의 지대한 관심 대상으로 변모했다.

세 번째 특징은 부족한 협력기구와 관련 있다. 이런 기구들은 유엔 극동-아시아 경제사회 산하에 메콩강 하류조사 위원회(Mekong Committee)가 출범한 1957년에 생겨난 것들이다. 메콩강 하류조사 위원회는 유엔의 후원 하에 일련의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1995년에 메콩강 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로 변경됐다.

그 결과 위원회 활동은 기세가 한풀 꺾였다. 먼저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중국과 미얀마가 메콩강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떤 참가국도 영유권 문제를 양보해 수력발전 시설 건설과 같은 공동의 문제를 타협하는 데 나서려 하지 않았다. 이런 결정들은 위원회 외부에서 내려졌으며, 위원회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조율되는 대신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이론적인 주장만 되풀이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위원회 참여국 간의 협력이 의무적이지 않다는 점이 협력의 효율성을 더욱 낮췄다.

해결 불가능한 메콩강의 수자원 이용 문제는 동남아 국가들이 각자의 미래 계획을 조율할 능력이 부재하다는 사실과 크게 연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편으로는 라오스와 태국 간,

다른 한편으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이견이 대표적이다. 라오스는 수력발전을 개발해 전력을 이웃국 태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자국을 ‘동남아시아의 배터리’로 변모시키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가 라오스에는 추가적인 재정 수입이라는 전망을 열어 주는 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에는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메콩강의 발전 시설이 이들 국가의 식량 안보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메콩강 자원개발 문제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등장하기 전부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가졌다. 이 문제에 내재된 다양한 측면으로 인해 서로를 결속시키면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었다. 메콩강 문제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순에 빠진 국가들이 이 문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맥락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당시에 도 대두됐다.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메콩강 문제의 새로운 포커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 지도부가 취한 이런 류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일단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자체의 특징과 동남아시아에서 본 이니셔티브의 실현 특성<sup>1)</sup>은 접어두고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은 메콩강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갖춘 자원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취한다. 중국 정부는 메콩강 자원개발 기회를 중국-인도차이나 경제회랑 실현과 쿤밍-싱가포르 철도 부설, 지속 가능한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 이행과 결부한다. 중국은 메콩강을 인도차이나 국가 들로의 수출을 위한 주요 상품 수송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이 자국 수송선의 이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벌이는 메콩강의 가항 지역 확대 작업은 빠른 속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sup>2)</sup>

이는 메콩강의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나, 중국이 여기에 심각한 의미를 부여할 리 만무하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녹색 일대일로 발전 지침(Guidance on Promoting Green Belt and Road)을 중심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여러 문건에서는 계획된 조치 이행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향후 중국이 환경 기준 준수에 관심을 집중할 리 없다. 따라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생태 프로젝트’<sup>3)</sup>라는 관점은 적어도 메콩강 문제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 같다.

메콩강 문제의 사례는 중국이 경제적 자원을 정치적 자원과 통합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

1) Russel D., Blake B. (2019) Navigat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 Report of 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June. URL: // [https://asiasociety.org/sites/default/files/2019-06/Navigating%20the%20Belt%20and%20Road%20Initiative\\_2.pdf](https://asiasociety.org/sites/default/files/2019-06/Navigating%20the%20Belt%20and%20Road%20Initiative_2.pdf); Xue Gong. (2018) The Belt & Road Initiative and China's Influence in Southeast Asia. The Pacific Review. 14 November. URL: //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9512748.2018.1513950>

2) Sandford S. (2018) Chinese Initiatives Threaten Mekong River. The Voice of America. 19 September. URL: // <https://www.voanews.com/east-asia-pacific/chinese-initiatives-threaten-mekong-river>

3) Tomas J. (2019) China's BRI Negatively Impacting the Environment. The ASEAN Post. 19 February. URL: // <https://theaseanpost.com/article/chinas-bri-negatively-impacting-environment>

한다. 중국 화물선의 뒤를 이어 중국 경비대가 들어올 것이라는 추론은 논리적이다. 그에 따라 중국의 전반적인 대동남아 정책과 마찬가지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도 이 이니셔티브를 경제 지렛대로 활용하는 중국 중심의 안보 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이에 대한 증거는 중국으로부터 메콩강 국가들로의 화물 수송 활성화와 더불어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메콩강 유역의 여러 지역 순찰을 강화했고, 2018년 8월 경 그런 조치가 73차례 실시된 사례로 이미 증명된다.<sup>4)</sup>

두 번째 방향은 메콩강 문제가 중국을 만족시키는 시나리오대로 전개되도록 해 주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중국의 대캄보디아 및 라오스 정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캄보디아 영토 내 전력 시설을 포함한 메콩강의 발전 시설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캄보디아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캄보디아가 인구 면에서는 이웃국가인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에 크게 뒤지지만, 전력시장 가격 면에서는 이들 국가를 앞서는 빈국이라는 사실이다.<sup>5)</sup>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생산 시설을 발전시킨 외국 기업들이 전력 요금은 더 많이 지불하면서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 내수에도 기대할 수 없는 등 결국 두 배로 손해를 본다.

라오스의 사례도 이에 못지않게 눈에 띈

다. 쿤밍-싱가포르 철도 노선의 일부인 길이 240km의 쿤밍-비엔티엔 구간을 중국이 부설하는 것은 과장 없이 말하자면 재앙 수준으로 낙후된 인프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라오스에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고속철도 이외에도 터널 72개와 교량 170개<sup>6)</sup> 건설을 포함하는 중국의 프로젝트는 환경 등 라오스의 여타 동기를 압도한다.

프로젝트 규모는 총 60억 달러를 상회한다. 중국은 그 중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인 8억 4천만 달러는 라오스가 중국으로부터 5억 달러 차관을 저금리로 받아 투자한다.<sup>7)</sup> 그러나 라오스는 이조차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라오스 정부는 중국이 제시한 조건에 합의했다. 즉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조건은 중국이 철길을 따라 양 옆의 부지 몇 미터씩을 임차하는 것과 건설 예정인 역마다 부지 3km<sup>2</sup>씩 임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라오스가 중국의 차관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부지는 중국 기업에 넘어간다. 그러나 통과국 이익을 기대하는 라오스로서는 중국의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태국, 베트남과 같은 강국과 국경을 맞댄 내륙국 라오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라오스는 통과국이 되는 것이 이득이다.

중국이 자국의 계획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의 세 번째 방향은 란창강-메콩강 위원회가 설립된 후인 2015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위원회

4) Qingrun S. (2018) Lancang-Mekong Cooperation Promotes Regional Development. CGTN. 28 September. URL: // <https://news.cgtn.com/news/3d3d774e304d444e7a457a6333566d54/index.html>

5) Zhou L. (2018) Are Chinese-funded dams on the Mekong River washing away Cambodian livelihoods? // South China Morning Post. 31 March. URL: //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139751/are-chinese-funded-dams-mekong-river-washing-away>

6) Escobar P. (2019) Where the Silk Roads Meet the Mighty Mekong. Asia Times. 29 April. URL: // <https://www.asiatimes.com/2019/04/article/where-the-silk-roads-meet-the-mighty-mekong/>

7) Ibid

의 활동은 상호연계 강화(전력, 건설자재, ICT, 운송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발전, 초국경 경제 협력, 수자원 개발, 농업 발전 등 5개 부문과 빈곤을 감소에 집중된다. 이는 메콩강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이 경제 어젠다 자체를 벗어나 안보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 노선을 천명한 란창강-메콩강 위원회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 아세안의 세 가지 활동 방향과 (아세안과 중국이 참여하는) 아세안-메콩 개발 협력 프로그램, 메콩강 위원회와 업무를 조율한다.<sup>8)</sup>

란창강-메콩강 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중국을 부채질하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주요 목표는 메콩강 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계획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란창강-메콩강 위원회는 메콩강 위원회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그 이유는 전자의 포용적 어젠다 선언뿐만 아니라, 후자의 정치화된 역사적 배경에도 있다. 메콩강 위원회의 전신인 메콩강 하류 조사위원회는 중국 및 북베트남과의 대결을 위해 태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남베트남 등 친서방 비공산주의 동남아 국가들의 결집을 목표로 했다(이는 이후 베트남이 메콩강 위원회에 정회원 자격으로 가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

았다). 란창강-메콩강 위원회는 중국과 미얀마의 참여로 명백한 우위를 갖는다.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이들 국가 없이는 수자원 이용 문제에 대한 협력이 온전할 수도, 효과적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메콩강 관련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중국은 메콩강 위원회에 참여하려 하지도 않고, 사실 수자원 문제를 다루려 하지도 않는다. 중국에게 메콩강은 수원이자 이와 동시에 개발 도구로서의 중요성만을 가질 뿐이다.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댐 4개를 건설했고, 추가로 4개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소위 란창강 '댐 폭포'). 전망에 따르면 2030년경에 중국의 수력발전 시설은 메콩강의 수량 중 최대 20%를 처리할 수 있다.<sup>9)</sup> 따라서 중국은 역외 국가들과의 그 어떤 협의 없이도 수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 국가가 메콩강 하류 인근 국가들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중국 지도부는 현실적 측면에서 공동의 수자원 이용 문제 해결이 아닌 인도차이나 국가들과의 산업 협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장이 란창강-메콩강 위원회 회의에서 갈등 요인이 가장 적은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대표적이다.<sup>10)</sup> 수자원 이용 문제 자체에 대

8) (2016) Sanya Declaration of the First Lancang-Mekong Cooperation (LMC) Leaders' Meeting - For a Community of Shared Future of Peace and Prosperity among Lancang-Mekong Countr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3 March. URL: // [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350039.shtml](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350039.shtml)

9) Middleton C. (2018) Reciprocal Transboundary Cooperation on the Lancang-Mekong River: towards an Inclusive and Ecological Relationship.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November. URL: //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75fb39762cd94c2d69dc556/t/5bdbb77eb8a0458599d5e60d/1541126044860/Lancang+Mekong+Cooperation+Policy+Brief+Nov+2018-ed.pdf>

10) Biba S. (2016) China Drives Water Cooperation with Mekong Countries. The Third Pole. 1 February URL: // <https://www.thethirdpole.net/en/2016/02/01/china-drives-water-cooperation-with-mekong-countries/>

해 말하자면, 이 문제는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수자원 연구 센터에 위임됐다. 이 센터의 활동은 실질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립서비스의 성격을 띤다.<sup>11)</sup> 이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파트너국들에 이득만 가져다 준다는 중국의 일반적인 전략적 노선과 일치한다. 메콩강 문제를 두고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이 현실화된다. 중국은 인프라를 건설함으로써 가뭄 때는 이웃국들에 물을 공급하고, 장마 때는 홍수를 예방하는 등 이들 국가에 추가적인 발전 원천을 제공한다.<sup>12)</sup>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미뤄보면 메콩강 자원개발 문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위원회의 관심 밖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실현을 통해 메콩강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자국에 편리한 외부 환경을 조성한다는 평가는 전반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실현됨에 따라 이런 '포위' 전략이 지속·심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메콩강 협력 문제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포용적 어젠다의 일부로 포지셔닝하며 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차이나 국가들에 협력 동기를 더욱 강하게 유발할 것이다.

## 결론

조만간 메콩강 수자원 개발 문제는 중국-인도차이나 경제회랑 실현과 남중국해 상황 전개와 같이 중국-아세안 간 대화라는 일반적인 맥락의 영향력 하에서 전개될 것이다. 메콩강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은 문제 자체의 모순에서 벗어나 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려는 남중국해 군도에 대한 중국의 행보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메콩강 수자원 문제처럼 정해진 틀에서 해결 불가능하다면, 중국이 잘하는 방식대로 기존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메콩강 수자원 이용 문제에 대한 포용적 협력 어젠다는 심중팔구 아세안의 유사 어젠다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협력이 의무가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에 있는 기구들로 수용 가능한 중국의 정책은 이들의 시너지 효과와 새로운 기구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에 따라 시간은 중국의 편에서 있고, 메콩강 문제는 중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번역 :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11) Middleton C. (2018) Reciprocal Transboundary Cooperation on the Lancang-Mekong River: towards an Inclusive and Ecological Relationship.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November. URL: //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75fb39762cd94c2d69dc556/t/5bdbb77eb8a0458599d5e60d/1541126044860/Lancang+Mekong+Cooperation+Policy+Brief+Nov+2018-ed.pdf>

12) Walz E. (2017) China, Vietnam and the Mekong Problem. The News Lens. 18 November. URL: // <https://international.thenewslens.com/article/83569>

- 예브게니 카나예프(E.A. Kanaev) 러시아 국립고등경제대학교 교수
- 원제 : ИНДОКИТАЙСКИЙ ВЕКТОР ИНИЦИАТИВЫ ПОЯСА И ПУТИ:  
ПРОБЛЕМА ОСВОЕНИЯ РЕСУРСОВ РЕКИ МЕКОНГ И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 출처 : 아시아학의 제문제(Сборник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2019)



# 화폐·여신 시스템 및 금융 시장 트렌드 분석

세르게이 발렌테이

##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최적화

은행 지출의 최적화 필요성을 위해 손실을 내는 기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 주는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먼 지방에서의 ATM기 유지보수 비용이 그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프랜차이즈 상점의 금전 등록기에 플라스틱 카드를 통한 현금 지급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ATM 기기 수량 증가세는 2014년부터 중단됐다. 그때부터 ATM 기기 수는 23만 7천대에서 20만 1천대로 감소했다(그림 1). 백분율로 보면 하락폭은 미미하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다(그림 2).

예를 들면 지난 5년 간 무르만스크 주와 노브고로드 주에서는 현금 지급 기능이 있는 ATM 기기의 총 대수가 28% 감소했다. 니즈니노브고로드 주와 아르한겔스크 주, 부랴트 공화국과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도 관련 수치가 20% 이

상 하락했다. 동 기간 동안 러시아연방의 55개 주체에서 ATM 기기 수가 감소했다(그림 2). 이런 상황은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ATM 기기를 찾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후한 과거 인프라 때문에 ATM 기기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들도 있다. 무엇보다도 북캅카스 지역의 7개 공화국이 여기에 속한다. 상점의 금전 등록기를 통한 현금 인출 서비스가 도입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1. 보수적인 국민들이 상점에서의 결제 시 카드 사용법을 점차 익히게 될 것인데, 이는 본 서비스 제공의 전제가 은행 카드를 통한 결제이기 때문이다.
2. 러시아 지방에서 ATM 기기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3. 급여를 카드로 이체해주는 ‘급여 프로그램’ 시장에서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림 1. 러시아 내 ATM기기의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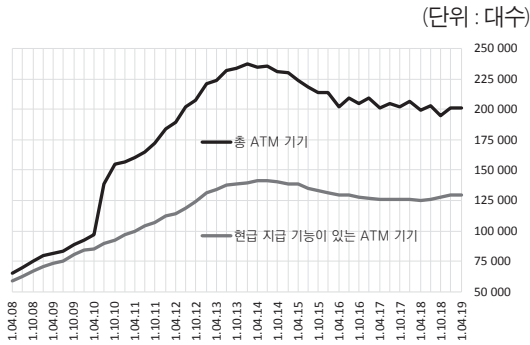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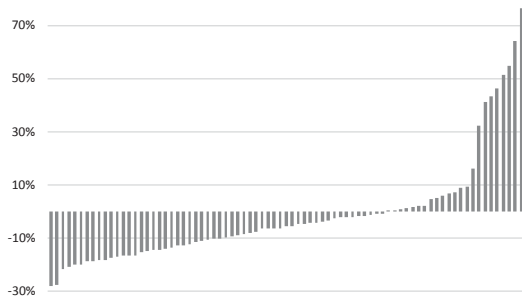


그림 2. 러시아 지역별 ATM 기기 수 증가세



## 성장의 10년, 그 결과

최악의 금융위기가 지나간 이후 지난 10년간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주요 지수(iMoex)는 약 35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iMoex 지수는 얼마 전 2,800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스크바 거래소의 대다수 종목별 지수도 놀라운 수익률을 보였다. 가장 큰 절대 성장률을 기록한 종목은 화학으로, 성장률이 850% 이상이다(그림 3). 화학 부문의 성장세는 특히 2009~2013년, 2015년에 강세를 보였다. 현재 이 지표는 베이싱(Basing) 단계에 있으며 다시 급등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석유·가스 부문도 큰 성장률을 보인다. 2011년 이전의 석유·가스 종목별 지표는 대개

iMoex와 일치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2009년 대비 60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눈에 띄게 증가했다.

소비 부문 지표도 480% 성장하는 등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다. 이 지표는 오랫동안 화학과 석유·가스 부문의 지표를 앞섰다. 그러나 2017년 중반부터는 (주로 2018년 마그니트사의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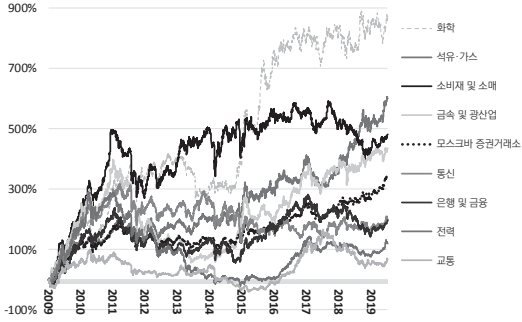
금속 및 광산업 부문의 성장세는 430%를 기록했다.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이 지표는 iMoex를 넘어섰으나, 2013~2015년에는 금속 기업들의 주가가 러시아 종합주가지수보다 느리게 상승했다. 상황은 유럽발 제재가 도입된 이후 정리됐다.

은행 및 금융 부문은 iMoex 지수와 비슷한 동향을 보인다. 8년간 이 부문의 성장세는 iMoex의 성장세와 궤도를 같이한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책을 강화하고 많은 은행이 문을 닫은 2017년에 러시아 금융시장의 성장세는 크게 감소했다. 현재 은행 및 금융주의 종목 지표 성장률은 2009년 대비 약 190%를 기록한다.

통신주의 종목 지표는 iMoex에 뒤진다. 러시아 통신기업들의 주가가 약 300% 상승했던 2009~2011년의 도약 이후 이 지표는 하락세로 접어들어 2015년에는 종합주가지수보다 뒤처지기 시작했다. 현재 통신기업들의 주식은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투자처는 아니다. 그 이유는 통신주의 성장세가 iMoex의 성장률보다 약 150% 뒤처지고, 2009년 대비 190%만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전력주의 종목 지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 지표는 2011년에 최고점을 지난 이후 성

그림 3.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주가지수와 러시아 주식시장 종목별 지표



장률 면에서 iMoex에 크게 뒤지면서 2019년에는 2009년 대비 성장세가 122%를 기록하는 등 최저 지표 중 하나가 됐다.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종목 지표는 교통주로, 2009년 대비 60%가 조금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분석 기간 교통주는 가장 낮은 투자 매력도를 보였다.

향후 시장 전망은 다수의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와 관련 있다. 이는 기술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이미 굳어진 극심한 침체기로부터 시장을 붙들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스태그네이션 속에서 향후 성장세는 저평가된 전력 부문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채무 연체, 통제 하에 있어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원칙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지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쌓인 빚은 점차 연체된다. 그러나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의 공식 통계자료는 이를 증명하지 않는다. 소비자금융의 성장세가 연 20% 이상(그림 4)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연

그림 4. 개인 부채 동향, 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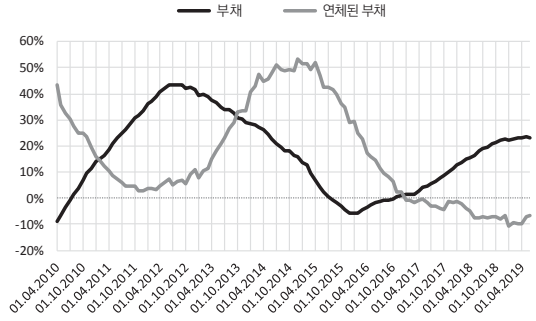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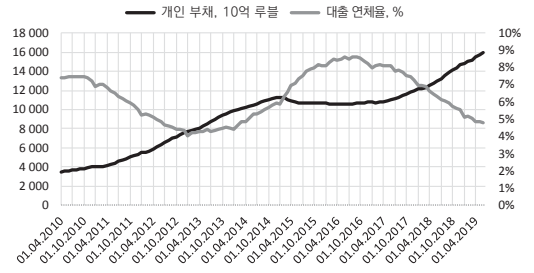


그림 5. 개인의 총 대부금 동향



체율이 5%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그림 5).

대부금 증대에 뒤이어 채무 연체의 증가를 막는 일은 아직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은행은 대부금 관리 신기술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은행이 더 많은 고객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수록 더 쉽게 연체 정보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상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문제가 있는 고객들과 제때 접촉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매우 빠르게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정보는 빠르게 구식이 되고 추가 업데이트를 요구한다.

현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더 이상 대용량 정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IT 시장에서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기술 중에는 하둡(Hadoop), 맵리듀스(Map Reduce), 노에스큐엘(NoSQL) 등이 있다. 이런

기술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즉 어떤 정보의 추출을 요청받은 데이터베이스는 이 요청을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고, 이후에 받은 정보를 보다 더 구조화된 형태로 통합한다. 이런 원칙은 ‘셰어링(Sharing)’이라고 불린다. 셰어링은 대용량 정보 분석 과정에서 요청 처리 속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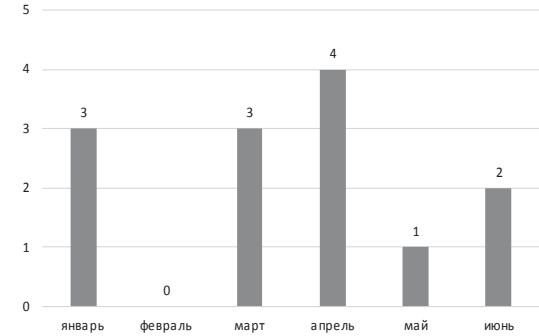
빅데이터의 도입을 통해 고객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채 규모와 이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모델들을 구축함으로써 연계된 부채 규모를 분석할 수 있고, 이는 은행이 보다 더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은행은 채무자들이 신청서에 남겨놓는 무미건조한 통계자료에만 국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SNS나 플랫폼, 기타 자원에 저장되는 정보도 다양한 심사를 통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밖에 프로그램 봇을 도입함으로써 은행 고객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고, 이는 문제성 자산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은행 허가증 회수, 더욱 줄어들어

올 6월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은행 업무 수행

그림 6. 2019년 월별 허가 회수 은행 수



에 대한 허가증을 2건 회수했고, 이는 2019년의 평균 수준에 부합한다(그림 6).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프라임파이낸스 은행과 노보시비르스크의 브자이모데이스트비에 은행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 은행은 러시아연방의 은행 가운데 자산 규모 면에서 각각 300위권과 400위권에 위치했다(표 1).

러시아 중앙은행은 프라임파이낸스 은행의 재무보고의 질에 불만이 있었다. 프라임파이낸스 은행은 필수 기준을 형식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인위적인 자본을 유지하는 ‘순환’ 업무를 시행했고, 은행 업무에 관한 연방법과 러시아 중앙은행 규정을 위반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2개월 동안 이 은행에 개인의 자금 유치 제한과 같은 집행 조치를 수차례 취했다. 프라임파이낸스 은행의 창구에 2억 6천 9백만 루블이 넘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적발된 이

표 1. 2019년 6월에 허가를 상실한 은행들

No.	허가증이 회수되고 허가가 취소된 금융 기관 (러시아 중앙은행의 명령 발표 일자순)	등록 지역 (은행 허가증 유효기간)	2019년 5월 1일 현재	
			자산 규모 (10억 루블)	자산 순위
1	프라임파이낸스	상트 페테르부르크 (1994.03.18.-2019.06.06.)	2.6	366
2	브자이모데이스트비에	노보시비르스크주 (1992.01.08.-2019.06.06)	0.7	444

후 러시아 중앙은행은 프라임파이낸스 은행이 완전히 자금을 소진했다고 밝혔다.

노보시비리스크의 브자이모데이스트비에은행은 재정 지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은폐하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 중앙은행의 요구에 따라 이 은행의 자산 재무 보고에 실질 자산 가치가 반영되자 은행 자본이 엄청나게(40% 이상) 감소했고, 이는 채권자들과 예금주들의 이익에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 더욱이 유동성 상실과 관련해 이 은행은 채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 은행 신용등급의 정확도

은행 신용등급은 다른 모든 분석 연구와 마찬가지로 늘 주관적이다.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도는 대부분 신용평가사의 위상과 그 활동 경험에 달렸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공인 신용평가사들의 의견만을 신뢰할 것을 권고한다.

평판은 신용평가사들이 수행한 성공적인 활동의 원천이다. 따라서 고착화된 평판을 가진 신용평가사들은 자신들의 위상에 의심을 거의 받지 않는다. 한편, 문제가 다분한 은행들은 은행시스템에서 몰아내려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활동은 은행이 부여받는 신용등급의 정확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한다.

<표 2>는 신용평가가 이뤄진 지 한 달여 후에 허가증이 회수됐거나 강제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된 일련의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보여준다.

신용평가사들의 13개 평가 중 10개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은행 두 곳만이 '부정적' 전망을 받았다.

이 사실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 사실은 분명하다. 중앙은행이 공인한 신용평가사들의 높은 평가조차도 은행 신뢰도를 보장하지 못한다. 신용평가사들이 무엇보다도 채무불이행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

표 2. 허가 회수나 워크아웃 절차 시작 한 달 전 은행 신용등급

은행	신용평가사	장기 국제 신용등급	국내 신용등급	국내 신용등급 전망
템뱅크	AK&M			부정적
스푸르트	RusRating	BB	BBB	안정적
유그라	NRA		BBB+	
겐뱅크	NRA		BBB+	
오트크리티예	S&P	B+		
	무디스	Ba3		부정적
	ACRA		BBB-(ru)	안정적
프롬스바즈	S&P	B+		
	무디스	B2		발전적
	Expert RA		ruBBB-	발전적
아시아태평양은행	피치	CCC (높은 신용 리스크)		부정적
산트페테르부르크 국제은행	S&P	B-		부정적
	Expert RA		ruB+	안정적

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예를 들면 경기 변동이나 전략적 조치를 취할 때 주요 자산가들에 대한 의존도, 현재의 유동성 문제 등과 같은 기타 요인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평가방법을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지만, 모든 은행들이 평가되는 기준은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일부 주요 요인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할 수 있고, 결국 이는 그릇된 평가의 발표로 이어진다.

은행 신뢰도를 보다 더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대차대조표 관련 지표나 표준 지표부터 금융기관의 지도부를 둘러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연구까지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체계적인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 규모의 은행에서는 자산 규모 면에서 TOP 30에 속하는 은행들과는 달리 부정적 경향을 포착하기 훨씬 쉽다. 발표되는 보고서 덕분에 주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지만, 여기에 완전히 의지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은행들은 훨씬 더 주도면밀하게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숨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 주택담보대출, 젊어지다

러시아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주택담보대출(부동산 담보)에 관한 연방법'이 서명된 1998년 여름에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있었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는 사실상 경쟁이 부재했다.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는 스페르방크와 특별히 설립된 '주택담보대출청(AIZHK),'

그리고 해외자본이 참여한 일부 특수은행들(예를 들면 델타크레딧이나 라이파이젠은행)이 전부였다. 이 기간에는 금리가 30~35%였다. 채무자들은 매입 주택가격의 최소 40~50%를 최초 불입금으로 납입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 주택담보대출은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접근이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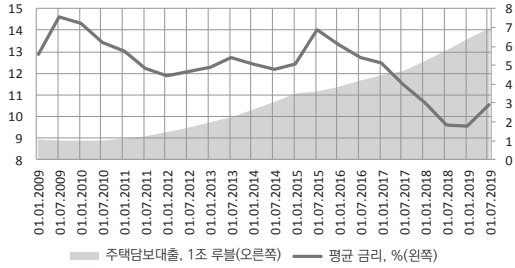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조건은 보다 더 매력적으로 변했다. 2019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신용기관의 수가 359곳으로 늘어났고, 평균 금리는 10%로 하락했다. 대출 신청 조건도 개선됐다. 현재 초기 불입금의 규모는 주택 매입가의 약 20%다.

대출자의 연령 구조도 크게 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청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의 연령은 크게 낮아졌다. 2000~2005년에 30세 이하의 대출자가 대출의 15%를 차지했다면, 2017~2018년에는 45~55%를 차지한다. 정부가 젊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양한 연방 프로그램 차원의 유리한 대출 조건, 다자녀 지원금과 보조금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회)는 예상했던 성과를 거뒀다. 향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최초 납입금과 은행 이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자의 연령이 낮아졌다는 또 다른 증거는 국립전문수금기업연합(NAPCA)이 산정한 대출자의 평균 소득이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러시아 국내 주택담보대출자의 평균 소득은 약 4만 루블로, 이는 신입사원의 급여에 부합한다.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은 지역에 따라 1만 6천 루블에서 1만 7천 루블이다. 근로자 2인의 가계 소득(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가정용 상품이다)으로 계산해보면 대출 상환비용은

그림 7. 주택담보대출 시장 지표



가계 소득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때 대도시에서는 이 금액이 두 배 상회해 2만 5천~3만 5천 루블을 기록한다.

러시아연방의 연방관구 중에서 2019년 5월에 지급된 주택담보대출 규모 면에서 선두 위치를 차지하는 곳으로는 중앙연방관구(3,442억 루블, 총 주택담보대출 중 31.9%), 프리볼시스키 연방관구(1,907억 루블, 17.7%), 북서연방관구(1,327억 루블, 12.3%)가 있다. 그 뒤를 시베리아연방관구(1,227억 루블, 11.4%)와 우랄연방관구(1,074억 루블, 약 10%)가 잇는다. 여타 연방관구에서 지급된 대출 규모는 총 대출 규모의 10% 미만이다. 러시아연방 연방주체 중에서는 모스크바(1,449억 루블, 13.4%)와 모스크바주(843억 루블, 7.8%), 상트페테르부르크(639억 루블, 5.9%), 튜멘주(446억 루블, 4.1%), 크라스노다르주(362억 루블, 3.4%)가 주택담보대출 규모 면에서 상위권에 있다.

### 은행 시스템이 발전한 북서연방관구, 그 중 선두에 선 상트페테르부르크

북서연방관구는 러시아 은행시스템 규모 면에서 2위를 차지한다. 대다수 자산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은행들에 몰려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의 뒤를 이어 명실공히 신용

기관들이 몰린 제2의 중심지다.

북서연방관구의 은행들이 축적한 고객들의 자금 6조 루블 중 상트페테르부르크가 4.3조 루블을 가지고 있다(표 3).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만 연방은행과 지방은행이 경쟁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은 기타 지역에서와는 달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등록된 은행들에 예금하는 것을 선호한다(저금액 중 30% 이상). 북서연방관구의 다른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6.4%)를 보이는 곳은 볼로그다 주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은행들이 보유한 개인 예금은 은행이 유치한 총 자금 중 37.4%를 차지하며, 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제 발전과 이곳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의 높은 자본 집중률을 증명한다. 북서연방관구의 다른 지역에서는 예금액이 은행이 유치한 자본 중 절반을 상회한다.

정부 보조금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 내 민간 자본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은행의 유치 자금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 카렐리아 공화국과 코미 공화국에서는 예금이 은행 자본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프스코프 주와 노브고로드 주에서도 70% 이상이다.

지역적 자본 원천의 규모를 고려해보면 여신 업무 실시를 위한 높은 잠재력을 갖춘 지역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와 볼로그다 주로, 이 두 지역에서는 예금이 대출을 크게 뛰어넘는다. 대출 규모가 예금 규모보다 큰 지역으로는 레닌그라드 주, 노브고로드 주, 칼리닌그라드 주, 프스코프 주, 카렐리아 공화국과 코미 공화국이 있다.

북서연방관구의 지방은행들이 공통적으로

표 3. 2019년 5월 1일 현재 북서연방관구의 은행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 지표

지역	고객 예금, 백만 루블	개인 예금, 백만 루블	은행 자본 중 개인 예금의 비중	대출, 백만 루블	대출/고객 예금			주민 1인당 예금, 루블		
					모든 은행	지역 은행	타 지역 은행	모든 은행	지역 은행	타지역 은행
북서연방관구	6,006,416	2,704,025	45.0%	5,029,746	83.7%	62.5%	79.3%	252,374	53,009	199,365
카렐리아 공화국	102,069	77,482	75.9%	119,503	117.1%	60.0%	102.3%	122,937	12	122,925
코미 공화국	155,660	120,299	77.3%	158,532	101.8%	34.9%	96.9%	135,563	2,827	132,736
아르한겔스크 주	253,329	170,677	67.4%	239,495	94.5%	-	75.3%	147,597	-	147,597
네네츠 자치구 포합	15,652	10,847	69.3%	19,639	125.5%	-	-	-	-	-
아르한겔스크주 (네네츠 자치구 제외)	237,676	159,831	67.2%	219,856	92.5%	-	-	-	-	-
볼로그다주	278,593	146,230	52.5%	210,269	75.5%	62.9%	62.0%	133,176	8,525	124,651
칼리닌그라드 주	259,489	143,512	53.3%	294,693	113.6%	23.8%	110.0%	188,558	5,869	182,690
레닌그라드 주	234,103	153,923	65.8%	542,860	231.9%	86.7%	202.1%	100,532	-	100,532
무르만스크 주	225,366	154,636	68.6%	190,521	84.5%	36.4%	62.8%	199,941	402	199,539
노브고로드 주	83,316	59,692	71.6%	114,179	137.0%	29.2%	115.8%	101,697	4,848	96,849
프스코프 주	80,594	58,132	72.1%	84,736	105.1%	60.5%	100.5%	90,276	1,402	88,875
상트페테르부르크	4,333,898	1,619,442	37.4%	3,074,959	71.0%	63.5%	66.2%	479,445	150,718	328,726

보이는 약세는 이들이 현지에서의 대출을 위해  
국민 및 비금융기업들의 모든 자금을 활용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로 강조된다.

번역 :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세르게이 발렌테이(S. D. Velentey): 모스크바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교수  
· 원제 : Анализ трендов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системы и финансовых рынков  
· 출처 : 플레하노프 러시아경제대학교 시사동향 제7호(2019년 7월)



# 러시아연방 연방주체 경제 발전 추세

세르게이 발렌테이

본 분석보고서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 연방주체들의 경제발전 추세에 대한 연구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연방주체의 순위와 그 특징적인 경제발전 추세는 필자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2012년부터 연방주의/Federalism 학술지 참조).

본 보고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통합지수 계산 시 더 큰 국내 투자 비중.
- 외국인 투자 비중 축소.

이는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 자본 송환 정책에 따라 수정된 것이다. 이 정책은 과거 러시아 경제에 투영됐지만, 금융 회계와 통계 자료상 외국인 투자로 분류됐던 자금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2015~2017년 사이 순위의 통합지수 환산은 지역경제 발전추세의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의미를 고려한) 자료 비교는 2015~2017년 기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무엇보다도 2015년부터 행해지고 있는 ‘강한’ 연방주체와 ‘약한’ 연방주체의 차별화 증가(성장 역학의 격차 증가)에 대한 특정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 러시아 연방주체 등급 구분 결과

지역 등급 구분 원칙은 2018년 러시아 연방주체들의 경제발전 추세 분석보고서에서 설명됐기 때문에(<http://www.rea.ru/ru/Pages/exspertixareu.aspx>) 이를 되풀이하지 않고 평점 평가결과를 살펴보자(표 1).

\* 2018년 초 등급 구분은 공식 발표된 지역 내 총생산 자료의 기간으로 제한됐다. 2018년 분석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연방주체 목록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포함되지 않았다(예외적 상황 때문에).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시, 네네츠 자치구는 이르한겔스크 주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2017년 러시아 지역 평점 평가

순위	러시아 연방주체	통합 지수 값	순위	러시아 연방주체	통합 지수 값
1	사할린 주	327.82	41	로스토프 주	68.09
2	야말-네네츠 자치구	318.36	42	오렌부르크 주	67.58
3	튜멘 주	153.37	43	부라티야 공화국	67.26
4	사하 공화국(야쿠티아)	132.38	44	니제고로드 주	66.67
5	레닌그라드 주	130.02	45	코스트로마 주	65.56
6	한티-만시 자치구-유그라	125.99	46	툼스크 주	65.31
7	아무르 주	120.98	47	야로슬라프 주	64.97
8	유대인 자치 주	117.01	48	스베르들롭스크 주	64.90
9	리페츠크 주	110.84	49	사마라 주	62.05
10	탐보프 주	108.87	50	사라토프 주	61.90
11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	108.04	51	잉구세티야 공화국	61.82
12	체첸 공화국	99.11	52	캄차카 변경	61.74
13	칼루가 주	94.90	53	아디게야 공화국	61.08
14	타타르스탄 공화국	94.43	54	오를 주	60.42
15	다게스탄 공화국	94.30	55	블로그드 주	59.55
16	첼랴빈스크 주	92.98	56	스타브로폴 변경	59.55
17	아르한겔스크 주	92.33	57	알타이 공화국	59.01
18	보로네즈 주	91.71	58	스몰렌스크 주	58.99
19	마가단 주	90.05	59	랴잔주	58.26
20	아스트라한 주	87.36	60	카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 공화국	57.92
21	이르쿠츠크 주	87.00	61	북오세티야-알라니아 공화국	57.53
22	크라스노다르 변경	84.88	62	이바노보 주	56.74
23	모르도비아 공화국	82.41	63	블라디미르 주	56.48
24	칼리닌그라드 주	81.75	64	하바롭스크 변경	55.00
25	모스크바 주	79.68	65	추바시 공화국	54.99
26	노브고로드 주	78.34	66	프리모르스키 변경	54.60
27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75.91	67	노보시비르스크 주	54.54
28	축치 자치구	75.83	68	프스코프 주	52.27
29	페름 변경	74.74	69	키로프 주	49.90
30	울리야노프 주	74.19	70	우드무르트 공화국	48.55
31	툴라 주	72.63	71	브랴nsk 주	48.25
32	볼고그라드 주	70.94	72	알타이 변경	46.60
33	벨고로드 주	70.93	73	마리 엘 공화국	46.38
34	자바이칼 변경	70.73	74	칼미크 공화국	46.20
35	트베리 주	70.31	75	옴스크 주	43.35
36	펜자 주	69.08	76	케메로보 주	39.33
37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69.04	77	하카시아 공화국	35.62
38	코미 공화국	68.82	78	쿠르간 주	35.13
39	무르만스크 주	68.72	79	카렐리아 공화국	33.73
40	쿠르스크 주	68.64	80	티바 공화국	27.51

러시아 지역에 대한 평점 평가에서 예상대로 마지막 순위는 티바 공화국(80위, 평점 27.51), 상위 순위는 러시아의 자원 채굴 관련 연방주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의외의 결과는 야말-네네츠 자치관구(2위, 평점 318.36)가 사할린 주(평점 327.82)에 1위 자리를 넘겨주었고, 레닌그라드 주(평점 130.02)가 한티만시 자치구-유그라(평점 125.99)를 밀어내고 7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는 사실이다. 아무르 주는 6위에서 7위로 자리를 바꾸었다(평점 120.98).

아래에서 살펴볼 지역 경제발전의 특징적인 추세는 예상대로 지역들의 순위와 발전 잠재력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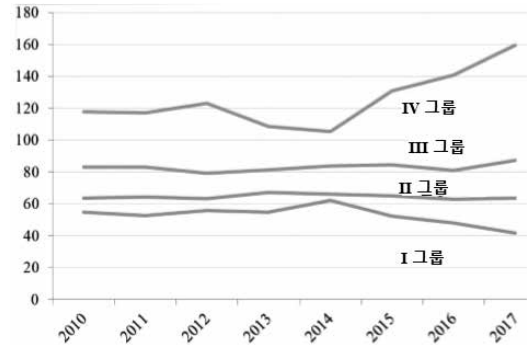
### 지역 경제발전의 일반 추세

필자의 방법론에 따르면, 러시아 지역은 4개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그 발전 추세에 대한 총괄적 그룹화는 다양한 지역 그룹의 발전 추세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 2>에 제시돼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추세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러시아의 국가 지역정책은 획일적일 수 없다. 둘째, 개선된 국가 지역정책은 러시아 연방주체의 경제 및 투자 잠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의 정확성은 12개 하위그룹의 지역 발전 경향에 의해 확인된다.

I.I 그룹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향 추세의, 순위가 낮은 지역; I.II 그룹 - 일정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순위가 낮은 지역; I.III 그룹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향 추세의, 순위가 낮은 지역; II.I 그룹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향 추

그림 1. 러시아연방주체 그룹의 발전 추세



I 그룹 - 순위가 낮은 지역(통합 지수 값 50 이하);  
 II 그룹 - 중간보다 낮은 순위 지역(지수 값 75 미만);  
 III 그룹 - 중간보다 높은 순위 지역(지수 값 100 이하);  
 IV 그룹 - 순위가 높은 지역(지수 값 100 이상)

세의, 중간 이하 순위 지역; II.II 그룹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향 추세의, 중간 이하 순위 지역; III.I 그룹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향 추세의, 중간 이상 순위 지역; III.II 그룹 - 일정한 추세가 없는 중간 이상 순위 지역; III.III 그룹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향 추세의, 중간 이상 순위 지역 주체; IV.I 그룹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향 추세의, 순위가 높은 지역; IV.II 그룹 - 일정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순위가 높은 지역; IV.III 그룹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향 추세의, 순위가 높은 지역.

### 순위가 낮은 지역들

2018년 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향 추세의, 순위가 낮은 지역 그룹에는(그림 2) 옴스크 주(75위, 평점 43.35), 케메로보 주(76위, 평점 39.33)와 하카시아 공화국(77위, 평점 35.62)이 포함됐다.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여

준다. 하카시아 공화국은 2014년에는 일부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하더라도 2010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케메로보 주는 2013년 이전에는 일부 상승세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옴스크 주는 점진적인 하락 지역이다(2012년 이전 옴스크 주는 II 그룹에 포함됐다).

하카시아 공화국은 실제로 모든 평가지수에서 러시아 평균과 시베리아 연방관구 평균보다 점수가 더 낮다(이 그룹에 속하는 모든 지역이 시베리아 연방관구에 포함된다).

케메로보 주와 옴스크 주에서도 러시아연방 평균 이하 지수가 나타난다. 국내 총생산 구조에서 투자(건설) 비율(러시아 전체 평균 6.2 대비 케메로보 주 3.4, 옴스크 주 4.1),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러시아 전체 평균 0.213 대비 각각 0.196, 0.153)가 그러하다. 본질적으로 주택 면적도 낮게 나타난다. 즉, 러시아 평균은 국민 1,000명당 540㎡인 반면, 케메로보 주는 370㎡, 옴스크 주는 겨우 233㎡인 것이다.

발병률 지수는 러시아 평균을 상회한다. 러시아연방 평균 지수가 국민 1,000명당 778.9명일 때, 옴스크 주는 823명이고, 케메로보 주는 그보다 더 높은 890명이다.

케메로보 주에서는 환경 구성요소가 매우 특징적이다. 만일 러시아연방 전체에서 고정 오염

원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 평균 배출량이 지역 내 총생산(GRP) 100만 루블 당 4,400톤이라면, 케메로보 주에서는 GRP 100만 루블 당 114만 8,000톤이다(이것은 배출량 기준 상위(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한다).

평균적인 시베리아 연방관구와 마찬가지로 이 두 지역에서는 실업자 지수가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즉, 러시아 전체 평균 지수가 5.2명이라면, 이곳에서는 각각 7.1명과 7.0명이다. 수입 수준은 러시아 전체 수준보다 낮았으며, 특히 러시아 전체 평균 3,142만 2천 루블 대비 케메로보 주는 2,184만 루블, 옴스크 주는 2,522만 3천 루블이다.

이처럼, 이 연방주체들은 높은 경제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 및 투자 지표 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옴스크 주는 전통적으로 발달된 석유가공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 옴스크 주 석유가공 공단은 이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석유가공 기반 시설을 수직적 통합 기업인 가스프롬사에 포함시킨 일은 석유가공 기반 업무에 ‘처리 계획’(대동한 거래)을 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비즈니스 절차상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지역 예산 내 세금 수입을 급격하게 감소시켰다. 지방 정부는 비즈니스 대표뿐만 아니라 연방 권력구조와 지속적으로 상황 변화에 대해 협상하고 있지만, 모기업이 비즈니스 절차를 최적화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취소하라고 제안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5개 연방주체를 I.II 그룹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일정한 추세 없이 순위가 낮은 지역들은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향 추세의, 순위가 낮은 지역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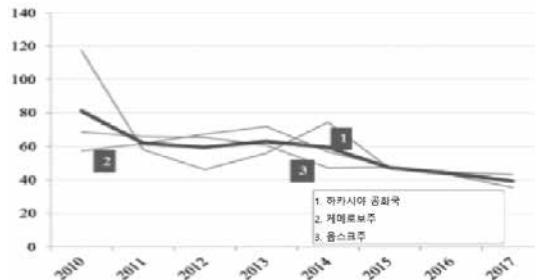


그림 3. 일정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순위가 낮은 지역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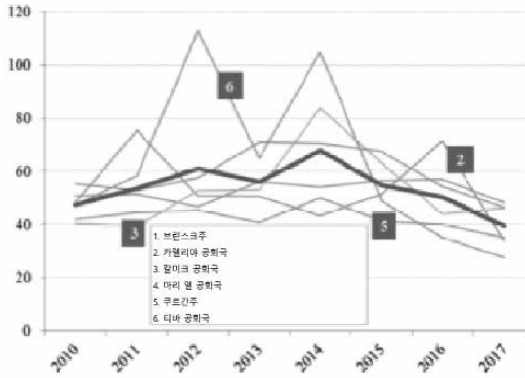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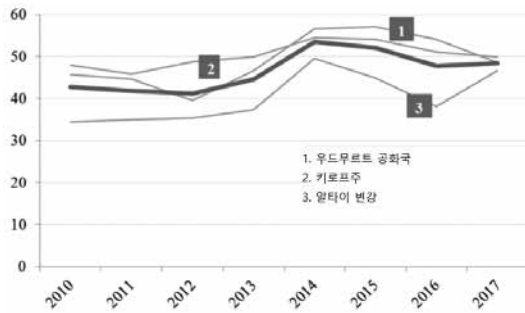


그림 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 추세의, 순위가 낮은 지역 그룹



I.III 그룹의 또 다른 상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 추세의, 순위가 낮은 지역들이다(그림 4).

2017년 초와 마찬가지로 알타이 변경이 이 그룹에 포함돼 있다. 즉, 평점 46.60, 순위 7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2017년 초에는 78위, 평점 38.06이었다) 2018년에 이미 이 지역의 순위가 실질적인 경제발전 추세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결론에 근거를 제시하며, 기본적으로 상승 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더 높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지만, 평균 이하의 발전 추세와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강 추세를 갖는 지역 그룹(II.III 그룹)에서 자리를 바꾼 키롭스크 주(평점 49.90)와 우드무르티야 공화국(평점 44.55)이 이곳 그룹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결론의 타당성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다.

### 중간 이하 순위 지역

중간 이하 순위 그룹인 II그룹은 가장 많은 수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강 추세의, 중간 이하 순위 연방주체 그룹(II.I 그룹)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단지, 여기에 노보시비르스크 주가 포함돼 있는 것은 예외이다. 이러한 ‘떨어짐’의 원인은 추가 분석을 필요로 한다.

II.II 그룹에는 일정하지 않은 발전 추세를 갖는 가장 많은 지역이 속해 있다. 즉, 18개 연방주체 또는 러시아 지역의 22.5%가 포함돼 있다(II 그룹 구성원의 45%).

중앙 연방관구의 6지역(해당 관구 지역의 1/3)과 프리볼시스키 연방관구의 4개 지역(해당 관구 지역의 약 1/3, 28.5%)가 이 그룹에 포함된다. 이 그룹의 모든 지역 중볼로고드 주(평점 70.94), 벨고로드 주(평점 70.93)와 코미 공화국(평점 68.82) 등 3개 지역만이 정점 형태의 순위 가치 상승을 보여주는데(각각 2011년과 2013년, 2016년에), 이것은 이 기간 동안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증가와 크게 관련이 있다.

반대로 이바노보 주(평점 56.74)는 2016년 순위에서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그룹의 나머지 지역들은 통합 평가 값에서 드러나지 않는 변동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이 그룹 지역에 대한 통합 지수 변화가 지수 하락 가능성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 이후의 증가를 전제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림 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강 추세, 중간 이하 순위 지역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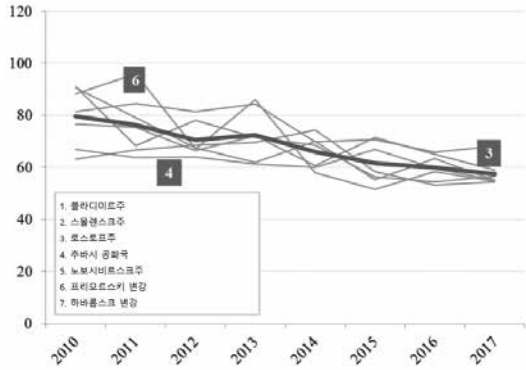


그림 6. 일정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중간 이하 순위 지역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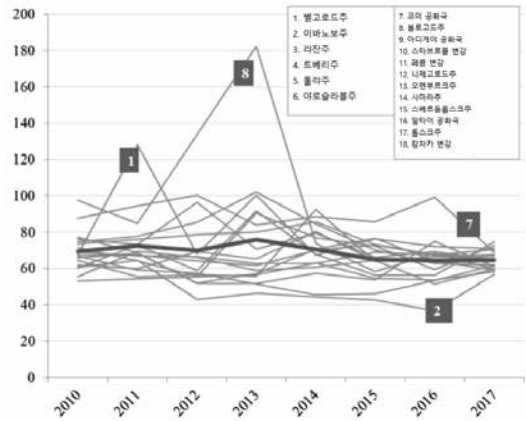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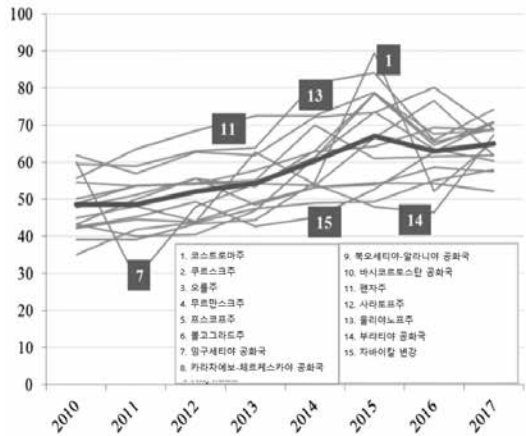


그림 7.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 추세, 중간 이하 순위 지역 그룹



긍정적 측면은 II 그룹에 포함된 40개 지역 중 15개 지역(37.5%)이 II.III 그룹에 포함된다 는 사실이다.

코스트로마 주는 통합 지수 개선이 눈에 띄 게 나타났다(평점 65.56). 2015년 순위에서 급상 승한 사실은 가공 부문 및 농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그 후 통합 지 수가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은 지속됐으 며, 이는 간접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표가 개선 되고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 다. 이 그룹의 나머지 지역들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며, 순위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 중간 이상 순위 지역들

2018년 초에는 이 III그룹 지역들의 수가 증 가한다. 이러한 과정은 두 가지 부정적 경향을 수반한다.

- 하락 추세 연방주체 수의 증가.
- 꾸준한 상승 추세 연방주체 수의 감소.

칼루가 주(13위, 평점 94.90), 첼랴빈스크 주(16 위, 평점 92.98),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22위, 평 점 79.68), 모스크바 주(25위, 평점 79.68)가 하향 추세를 띠는 그룹(IV.I 그룹)에 포함됐다는 사실 은 주목할 만하다(그림 8). 이것은 비록 그러한 가설이 추가 논쟁을 필요로 하지만, 무엇보다 도 투자를 이용하는 과정과 관련돼 있다.

일정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중간 이상 순 위 지역 그룹의 상황은 더 모순적이다(그림 9).

러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연방주

그림 8.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락 추세, 중간 이상 순위 지역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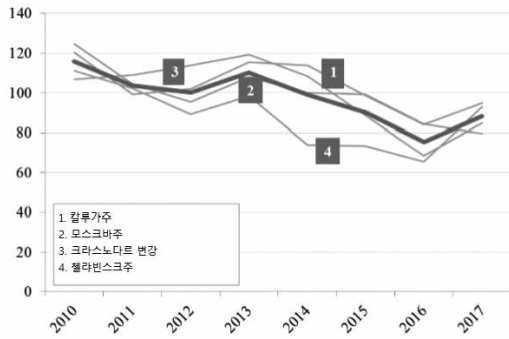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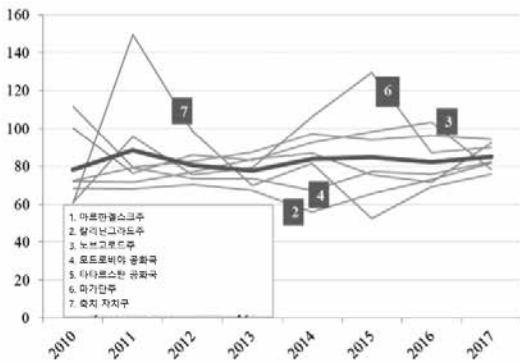


그림 9. 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중간 이상 순위 지역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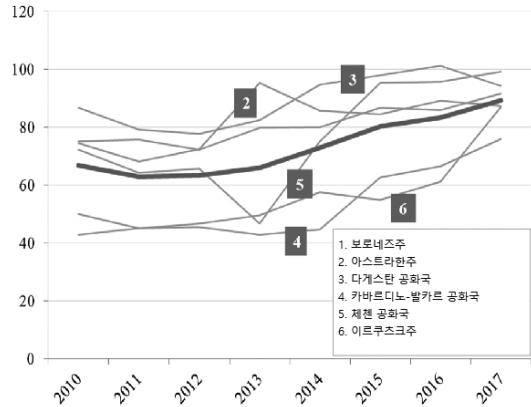


체 중 하나인 타타르스탄 공화국(평점 94.43)은 III.II 그룹에 속한다(14위). 노브고로드 주에 관한 의문점도 나타난다(평점 78.34) - 26위.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는 추세가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만은 아니며, 이 그룹에 어떤 지역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추가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그 순위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 즉,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2010년에, 노브고로드 주는 2016년에 상위 순위 그룹에 포함됐다. 그리고 비록 순위를 계산한 전체 기간의 자료가 미래에 이 연방주체들의 안정적인 통합지수 상승 추세에 대해 말해줄 수 없지만, 중간 수준 이상 그룹 내에서의 안정된 위치를 반영한다.

그림 1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 추세, 중간 이상 순위 지역 그룹



그리고 반대로 과거의 자료들을 고려하면 특정 연도의 순위 개선은 이러한 개선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가 발전 추세 역시 불확실하다.

즉, 상위 그룹에서 지역의 순위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 그룹에서 그러한 결론은 이전에는 안정적으로 아래쪽 그룹에 해당하는 통합지수를 가졌던 칼리닌그라드 주(평점 81.75, 24위)와 결과 면에서 극히 불안정한 축치 자치구(평점 75.83, 28위)에 적용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 추세, 중간 이상 순위 연방주체 그룹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그림 10).

III.III 그룹에 포함되는 지역들에서 상승 발전 추세는 틀림없이 연방 센터의 재정 지원과 관련돼 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입증된 사회·경제적 성공이 항상 실제 경제성장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추가 논거로 작용한다.

## 높은 순위 지역

순위가 높은 지역 그룹(IV 그룹) 상황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선도 지역 수의 증가이다(2017년 초 10개 지역 대비 11개 지역).

또한 IV 그룹 내에서 IV.I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주목해 보자(순위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락 추세인). 2017년 초 순위에서는 IV.I 그룹이 존재했으며 레닌그라드 주가 여기에 포함됐다(그림 11).

2018년 초 레닌그라드 주는 비록 5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추세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순위가 높은 그룹에 포함됐다

그림 11. 추세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순위가 높은 지역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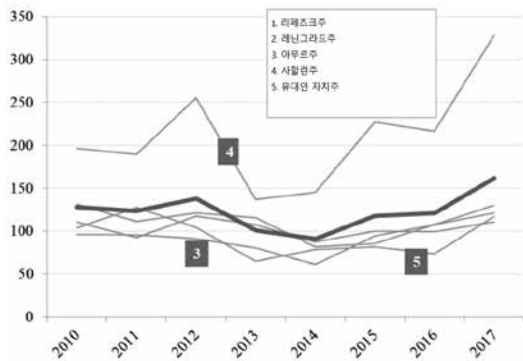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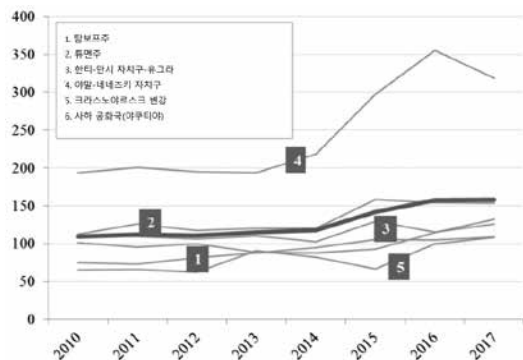


그림 1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 추세의, 순위가 높은 지역 그룹



(IV.II 그룹).

또한 아무르 주(7위, 평점 120.98)와 유대인 자치구(8위, 평점 117.01)를 IV.II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조해 보자(그림 12).

여기서 아무르 주의 순위는 극동에서 가장 효과적인 3대 선도개발구역에 포함되는 ‘벨로고르스크’ 선도개발구역(TOP) 지역 내 개발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또한 ‘시베리아의 힘’ 송유관 본선 건설과 극동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가스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의외의 변화는 2017년 초 25위에서(평점 73.58) 2018년 초 8위(평점 117.01)로 ‘뛰어오른’ 유대인 자치구에서 나타났다. 이곳에서 나타난 통합지수 순위 상승은 우선 외국인 투자의 급증과 관련된다(실제로 기저가 낮을 때 4배 이상). 무엇보다도 중국의 투자는 극동 유일의 철광석 생산지인 킴카노-수타르스크 선광 콤비나트 가동과 관련된다. IV 그룹의 또 하나의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 추세의, 순위가 높은 지역을 IV.III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탐보프주는(평점 108.87) 10위이며, 농업업단지의 꾸준한 발전 결과 이미 3년째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러시아 연방주체의 순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 추세 변화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러시아 연방주체 발전 추세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을 이러한 경향의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난 몇 년간의 결론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역경제의 높은 의존도도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의 ‘강한’ 연방주체와 ‘약한’ 연방주체 간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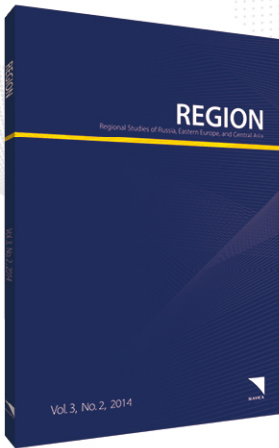
별화 정도가 증가(성장 역학의 차이 증가)된다는  
또 하나의 추세를 설명할 수 있다.

번역 : 이성민, 한국외국어대 강사  
lsmsy@hanmail.net

- 세르게이 발렌테이(S. D. Velentey): 모스크바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교수
- 원제 : Тренды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 субъектов РФ
- 출처 : 플레하노프 러시아경제대학교 시사분석 (2019년 7월)

#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 REGION

REGION is a peer-reviewed international journal that explores the history and cur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ffairs of the entire former Soviet bloc. In particular, the journal focuses on various facets of transformation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in the aforementioned regions, as well as the changing character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rest of world in the context of glocalization.

## Russia·Eurasia Focus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매주 발간하는  
「주간 Russia-Eurasia Focus」는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은 온라인 칼럼입니다.



# 2019

Vol.3 | No.3 Fall

## Russia Policy Review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031-330-4852 FAX.031-330-4851  
81, Oedae-ro, Mohyeon-eup,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035, Korea <http://www.rus.or.kr>